

것인지 아니면 성장률을 다소 회복할 것인지를 두고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에 기대와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이중 침체로 들어선다면 세계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소 성장률을 회복할 경우에는 세계 경제는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조금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독일이 여전히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속에서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다소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등 동유럽 역시 다소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의 경우 전년에 비해 조금은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7% 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모두가 예측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데 이의가 없다. 남미의 경우는 세계 경제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외환위기가 재발하거나 브라질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른바 남미 발 세계 공황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003년 세계 경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단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제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중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전반적으로는 회복세가 더디지만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3년 전체적으로는 2002년에 비해 다소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장기화되거나 미국 경제가 이중 침체로 접어들면 세계 경제는 급격히 후퇴할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세계적 차원에서 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남미 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여파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압박 및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경제

2003년 한국 경제는 대략 5%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정치권 및 경제계 그리고 민간경제연구소 모두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별 다른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 정도 사실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속에서도 6% 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작년에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대체적으로 3~5%의 성장을 예상한 것에 비해서도 더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국내 민간 소비 증대와 건설경기 부양책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에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비IT 전통산업이 호조를 띠면서 경기의 급락을 방어하고, IT 산업의 경우도 세계적으로는 침체에 빠져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통신네트워크보다는 휴대폰, LCD 모니터, 디지털 가전 등 소비재 기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년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한국경제가 2001년과 같은 경기 침체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말한 바의 5% 대의 성장을 이루면서 2002년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이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변수가 되는 것은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데 별 다른 이의가 없다. 다시 말해 2003년 한국경제는 2002년과 같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내수 상황은 오히려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거품 현상이 연착륙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예컨대 지난 97년은 외환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했다면 이번에는 디플레이가 한국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 하나 2003년 한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살펴보아야 하는 노무현 정권의 경제 정책과 재벌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여기에 2004년 총선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밝혔듯이, 내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문제가 신용공황으로 이어지거나 개인 파산자를 양산하게 하는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한 반대 급부는 자칫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대출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정책이나 금리 인상 조치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나 의도가 과연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모순을 축적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지에 있어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문제의 폭발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일 뿐 직접적·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급과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2003

년 한국경제 전망이 위와 같다고 할 때, 일단은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기보다는 2002년의 성장세를 조금 낮은 수준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또는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급격한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급과 민중은 지금 이미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조금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 없는 것이다. 역으로 2002년의 예에서 일 수 있듯이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것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과 유가 인상 또한 노동계급과 민중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5.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상태와 지형 변화

1) 대중적 노동운동

지난 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배계급 또는 부르주아 정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대중적 노동운동이었다. 특히 민주노총 출범 이후 대중투쟁은 곧 민주노총 투쟁으로 불릴 만큼 민주노총은 자본과 부르주아 정치의 대칭적 표현을 대표하였다. 비록 90년 대 중반 이후 시민운동이 나름대로의 운동적 근거를 확보하긴 하였지만 대중적 노동운동이 갖는 힘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다만 지난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매개로 비로소 대중운동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97년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고 지난 4·13 총선에 참여할 때까지도 민주노동당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의 다른 이름일 뿐 독자적

힘이나 조직으로 표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6·13 지방선거와 이번 대선을 통해 비로소 '진보정치' 영역과 민주노동당이라는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중적 노동운동은, 비록 내부적으로 실리주의와 조합주의가 확산되면서 운동노선과 투쟁 방식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작년 공공 3사 투쟁과 뒤이은 발전노동자 장기 투쟁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위력을 보여주었지만 민주노동당의 총파업 철회로 또 다시 위기를 자초하는 등 굴곡을 보이면서도 지난 노동법투쟁에서 제한적이거나 투쟁동력이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대중적 노동운동이 한국사회에서 이제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과 역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랬을 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대적 투쟁에서의 절대적 대표성과 지위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사회의 계급 역할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새로운 활로를 뚫지 못한다면 과거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적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와 같이 전망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중적 노동운동 내부에 실리주의와 조합주의가 커다란 흐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분간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조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면, 오히려 그를 조장하는 힘과 분위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까지 없었거나 미약했던 새로운 상황이 등장한 사실이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변화된 위상과 입지

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경과하면서 이른바 시민권을 완전히 획득하였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는 민주노동당의 하위 범주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독자적인 범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민주노동당의 상위 범주로까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붉은 악마'나 '촛불 시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불특정·무정형·비대칭·불연속한 대중행동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시민운동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대중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중적 노동운동이 실리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는데 실패하거나 또는 그러한 대중행동과의 결합·소통·연대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중행동 자체의 자립화가 진행되면서 별도의 해계모니를 형성할 경우 대중적 노동운동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그와 같은 대중행동이 기존 체제의 경직성과 사회적 습관을 흔드는 효과를 낳더라도 그러한 대중행동이 갖는 불특정·무정형·비대칭·불연속한 특성으로 인해 결국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전략 아래로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쨌든 지금 대중적 노동운동은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과 역할에서의 재정립을 객관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예컨대 직접적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대적 전선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정세에 대한 개입력을 발휘하고 주체 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중적 노동운동이라는 튼튼한 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점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은 내부적으로는 운동노선과 투쟁방식을 둘러싸고, 밖으로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

정립을 놓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2) (진보)정당·정파·전선(민중연대)·현장(조직)·계급적 사회(부문)운동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과연 '진보정당' 운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러한 운동노선이 노동계급의 전략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논쟁과는 별개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한국 자본주의가 과연 노동계급의 투쟁과 요구를 제도 정치 내로 수렴할 수 있을 만큼 개량적 물질 토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다. 또 하나는 사상 이념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인 친미, 반북(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각종 법적, 제도적 제약이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보정치'가 대중적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었다. 이의 또 다른 근거는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시민주의 정당들조차 국민정당화(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파당에 '진보정치'가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역사적·경험적으로도 87년 이후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또는 '진보진영'이 시도한 선거 참여가 언제나 참담한 결과를 낳고 해체됨으로써 위와 같은 인식은 더욱 사실적이 되었다.

그러나 97년 대선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이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결합·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치방침으로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면서 '진보정당' 운동은 운동적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6·13 지방선거와 이번 대선을 통해 '진보정당'은 마침내 대중적 근거까지 갖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로써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보정당'은 이제 민주노동운동의 하위·종속 범주에서 독자 범주 내지 상위 범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정치적·대중적 '시민권'까지를 확보하였다. 2004년 총선에서 원내 진출이라는 목표는 벌써부터 상향조정하는 현실이 되었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분간 주·객관적 조건으로 보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데,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치적·대중적 대표체가 대중적 노동운동(민주노동)에서 '진보정당'(민주노동당)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럴 경우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동원 체제로 전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기존 정치 방침이 안고 있는 폐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동정치 또는 계급정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전선운동 또는 민중연대투쟁전선 역시 '진보정당'의 보조 범주가 되거나 스스로 그러한 역할을 자처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진보정당'은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내에서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 정치지형 내의 한 분파로서 권력(부르주아 권력)에 참여하는 것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는 대중적 노동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리주의와 조합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며, 좌파운동 및 이와 근 거리에 있는 현장(조직)운동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문)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우에는 당분간 독자 영역을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좌파운동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독자적 세력으로 인지되고 있지 못하지만,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내에서는 하나

(one이 아닌 part)의 세력으로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 좌파운동은 대중적 노동운동과 대적 투쟁전선형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부여받아왔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전체 정세에 대한 개입력을 발휘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주체 형성 및 운동의 재조직화를 시도해왔다. 이제껏 좌파운동은 대중적 노동운동을 민주적·계급적 운동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사민주의 및 민족주의 정치 세력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전선을 형성해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지속되겠지만 노동자 민중운동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정치력을 유지·강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는 좌파운동이 노동자 민중운동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보정당'과 다른 독자적 정체성과 운동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되고 있다. 안으로는 좌파운동이 노동자 민중운동 내의 세력(part)으로서의 존재를 넘어 단일(one) 조직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연동하여 현장의 비민주노동당 활동가 및 이에 동의하는 현장노동자 역시 좌파운동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편 전선(민중연대)운동 역시 향후 그 위상과 역할이 재조정 또는 재편될 국면을 맞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전통적·고전적 의미에서의 전선운동은 지속적으로 약화·분화되어 왔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 성장과 이에 따른 노동계급의 형성, 농민 인구의 감소, 그리고 일반민주주의의 확장이 가져온 필연적(합법칙적) 결과이다. 그런 속에서도 역으로 전선운동의 약화·분화를 계속적으로 저지해 온 상쇄 요인이 있어 왔다. 가장 결정적인 상쇄 요인은 말할 것도 없이 분단구조(상황)이

다. 분단구조는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 좌파'(세력과 이데올로기 모두)를 끊임없이 재생산해 냈다. 이들에게 있어 전선운동은 언제나 최대의 목표가 되어왔다. 이게 지금의 전선운동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다음 대중운동의 성장과 그에 못 미치는 정치운동의 상태이다. 전선운동은 대중운동이 서로 만나는 연대운동의 장으로 여겨져 왔다. 당연히 정치적 미분화(정치운동의 미약)에 따른 결과이다. 끝으로 좌파의 주관적 열망이다. 좌파의 주관적 열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노동운동에 대한 우회적 개입을 전선운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당운동(제도 정당이든, 비제도 정당이든) 또는 조직운동(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에 대한 불신(따라서 전선운동)과 함께 전선(운동)을 아래로부터의 대중권력 또는 대체권력을 형성하는 계기·과정·영역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들 외에 부분적으로는 시민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전선(민중연대)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 이것들이 전선운동의 약화·분화를 저지하는 상쇄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이게 앞에서 말한 합법칙적 경로를 거스를 수는 당연히 없는 노릇이다.

87년이후 피지배계급의운동 또는 대적투쟁 전선을 대표해 온 운동은 너무나 명백히 대중적 노동운동이었다. 전선운동의 위력이 전 사회적으로 표현된 시절은 오히려 87년 이전 이른바 '재야운동' 시절이었다. 실체가 있는 것은 민주노총, 한총련, 전농, 전빈련 각각이거나 아니면 '○○공대위' '○○대책위'일 뿐 결코 전국연합이거나 전국민중연대가 아니다. 이제 '진보정당'의 출현과 함께 전선운동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약화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전체토론 2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천삼년 이월팔일
오후 세시부터 여섯시까지

사회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발제1	김상곤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무총장, 한신대 민주화 이행과 한국사회운동의 과제
발제2	김준	광주참여자치21 시민교육센터소장, 목포대 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제3	박아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민중운동의 전망
토론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희수	민주노총 대협실장
	김광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무총장

<전체토론2>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발제1 **민주화 이행과 한국사회운동의 과제**
 김상곤(교수노조 사무총장, 안신대)

1. 머리말

한국의 사회운동¹⁾은 시민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 진보, 희망을 키워왔고 그 활동성과 투쟁성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괄목할만한 정도이다. 이는 진보적인 이념과 헌신적인 실천 활동가, 적극적인 전략 전술가들의 합작과 연대의 결과이다. 우리 사회는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즉 민주화 대투쟁을 거치면서 사회운동이 급속도로 분화 발전되었으며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는 종래의 사회운동 개념이 해체되어 그 스펙트럼과 다양성이 확장되었다.

이 글에서는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이 발전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정권의 교체를 앞둔 지점에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87년의 대투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6월항쟁은 시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서서 정치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자를 자임한 투쟁이며 79월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민주적인 현장을 확보하고 노동조건을 주체적으로 바꾸어내고자 들불처럼 일어난 항쟁이었

다. 이렇게 시민진영과 노동진영이 자율적으로 기치를 내걸고 사회와 현장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크게는 해방 이후 지배권력과 총자본의 억압과 착취에서 비롯되지만 가깝게는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권력을 탈취하여 정통성을 결여한 전두환 정권의 폭압과 정경유착적인 수탈에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투쟁적 운동성은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진 역사적인 저항과 해방정신의 맥이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쿠데타와 내란으로 한국 현대사를 다시 한번 무참하게 짓밟았던 신군부정권의 등장시부터 살펴보는 것이 87년 이후의 사회운동의 정세와 실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1980년 이후의 정세와 사회운동에 관해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과학적인 성과들을 기반으로 사회운동의 중요한 배경정세인 정치권력 및 자본운동의 성격과 사회운동의 특성을 대응시켜 구체적으로 사회운동의 발전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 위에서 앞으로의 사회

1) 이 글에서 사회운동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삼는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운동, 비정부운동, 신사회운동 등을 통칭하지만 여기에서는 정치사회경제적인 일반민주주의의 그 이상을 지향하는 진보적 시민운동을 주요 범주로 한다. 민중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대중적 계급운동과 전선운동, 계급적 지식인 운동 등을 통칭하는데 여기에서는 계급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을 포괄하는 범주로 한다.

운동을 전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을 위한 대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민주화 이행과 정세의 흐름

한국의 정치사회는 민중들의 처절한 항쟁과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민주화를 서서히 이행해 왔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권력의 성격에 따라 군부권위주의적인 신군부 집권기(I)와 카리스마적 권위주의적인 문민세력의 집권기(II)로 대별하고 이 각 시기 내에서도 정권에 따라 정세와 존재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세분해서(I-1, I-2, II-1, II-2)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은 II기와는 다른 성격(III)을 가질 수도 있지만 II기의 연장(II-3)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대별하면 두 기나 세 기로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접근으로 세분하여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1. 정치정세와 노무현 정권의 성격

	신군부 권위주의		카리스마적 권위주의		(?)
	I-1	I-2	II-1	II-2	III(II-3)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념	극우보수주의	우편향보수주의	우편향신자유주의	민족적신자유주의	개혁적신자유주의 (합리적신자유주의)
권력장악 계기	12.12쿠데타 5.18내란	6.29선언	3당합당	DJP연합	노사모와 단일화 효과
권력의 성격	(신)군부권위주의 (군부파시즘)	좌동	카리스마적 민간권위주의	좌동	시민적민주주의 (시민적권위주의)
대립점 (민주화 이행정도)	(신)군부반민주 대 민주	좌동	반민주 대 민주 (절차적 민주주의)	수구 대 개혁 (의사개혁주의)	진보 대 보수 (반개혁 대 개혁)

진행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대처정권의 규제 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레이건 정권의 공급중시의 레이건노믹스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6.29선언으로 국면 전환하여 집권한 I-2기 노태우정권은 파시즘적 통치와 극우성에서 전두환정권보다는 약간은 탄력적이었지만 속성에서는 비슷하였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의 취약성을 극복하기위해 90년 3당합당을 하였으며 민중들의 거대한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하였다.

80년대의 전두환 정권에 이은 노태우 정권에 대한 비판을 민교협의 창립 3주년 성명(1990.7.20)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현정권은 6.29선언이라는 기만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두환정권을 승계한 후 89년 초부터 공안정국 조성, 기층민중의 생존권 요구 투쟁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의 탄압, 의법계폐 및 각종 민주화조처 약속의 파기, 폭력재벌과 유착 심화, 전략적인 북방정책 강행, 제국주의적인 미국, 일본과 결탁심화, 보수정치권과 반동적 결속, 정보정치와 고도화 등 장기집권을 위한 일련의 기도를 집행해왔다.

현 정권의 이러한 반민중적 반민주적 작태는 위대한 민중시대가 되어야 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정권의 비정을 다음과 같이 국민에게 고발하여 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현정권은 경동성을 결여하고 있다. 노정권은 12.12 및 5.17 쿠데타에 그 태동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현정권은 기본적인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셋째, 현정권은 파쇼성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장기집권을 기도하고 있다.

넷째, 현정권은 오직 독점자본에 물질 기반을 둔 반민중적 정권이다.

다섯째, 현정권은 교육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교육을 경관과 반민주적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국제화 기치아래 개방화가 가속되고 3저호황의 해소로 경제침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입안되어 공기업민영화정책을 수립하여 착수하였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지만 자치권 위양은 미약하였으며 국민대중과의 약속과는 달리 신경영전략을 보편화하고 유연화 전략을 기조로 한 신노사관계정책을 실시한다. 사회문화적으로도 규제와 빗장을 부분적으로 풀어 시장적인 유연화를 도입한다. 국제적으로는 89년 독일통일, 90년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미국중심의 세계지배체제가 강화되며 지역별 경제블럭이 곳곳에서 추진되었다.

2) 카리스마적 권위주의기와 노무현정권기

II-1기인 김영삼정권은 90년 3당합당과 이면합의에 의해 군부파시즘과의 야합으로 생성되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초기에 군부 개혁, 정치개혁 등으로 사정정국을 형성하여 국민적인 민주화 기대를 받은 바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 전교조해직교사 복직 등 의미있는 조치들을 시도하였지만 기득권세력의 장벽과 정경유착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고 카리스마적 민간 권위주의 권력으로

표 2. 사회경제적 정세와 국제환경의 전개과정

	군부 권위주의		카리스마적 권위주의		(?)
	I-1	I-2	II-1	II-2	III(II-3)
사회경제적 정세	경제개방 산업구조개편 경영자율화 사회문화적 유희 정책 노동법 개악 국가보안법 체제	신자유주의 정책 입안 공기업민영화계획 개방화 가속 국제화 지방자치제 신노사관계 정책수립 신경영전략보편화 사회문화적유연화	신자유주의정책 본격화. 세계화, 지구화 WTO체제. 민영화 본격기획과 부분집행. 쌀 수입개방 신노사관계 강화 유연화 정책화 문화개방 미완의 민주화 프로젝트	IMF 체제 4대부문구조조정 전면적 민영화 20:80 사회 노사정 위원회 유연화의 법제화 남북협력, 여성부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젝트	신자유주의적 개혁 조절 프로젝트
국제 정세	신자유주의 대두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사회주의 붕괴 미국 중심의 세계지배체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면 공세	동아시아 경제위기 미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팽창	미국의 패권주의 폭발 세계경제의 불안 정성 증대 북한의 위기와 한반도 불안

서 기득권세력과 자본 중심의 우편향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선거공약과는 달리 쌀 개방과 교육문화적 개방을 담은 우루과이라운드에 협정하고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세계화 지구화를 외치며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운동을 억압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공기업 전체에 대한 민영화방침을 정하고 부분적으로 집행하였다. 지식인과 국민의 저항으로 5.18특별법을 만들고 5.6공 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신노사관계를 추진하고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개악하였으나 노동자, 시민의 대규모적인 저항에 부딪쳐 후퇴하는 수모를 당하였다. 김영삼정권의 민주화프로젝

트는 태생적 한계, 자식을 비롯한 권력 내부의 부패, 신공안정국 조성, 개혁의 후퇴 등으로 최소한도의 이행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전면 공세가 이루어지고 미국과 국제금융기관들의 계획적인 통제가 강화되었던 시기이다. 김영삼정부는 결국 금융위기로 인한 IMF통제체제로 직행하였다.

DJP연합을 계기 삼아 집권한 II-2기 김대중정권은 이전 정권보다는 약하지만 역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IMF체제라는 긴박성 때문에 초기에 국민적인 동원능력과 지도력은 상당한 수준이었으

며 이것을 동원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재벌개혁 같은 경우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발과 로비로 곧바로 회귀하는 한계를 드러냈는데 결국 중상층 이하를 대상으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귀결되었다. 집권초기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햇볕정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정상회담을 이룩하고서 민족자존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초국적자본에의 경제 예속, 국제자본구조에의 편입화, 공기업체제 붕괴, 고용구조의 황폐화,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자립기반 파괴 등은 결국은 여소야대 국회와 함께 정권의 집행력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여기에다 각종 게이트, 두 아들의 부정비리 연루 등은 DJ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무참하게 깨뜨리고 정권퇴진 압력까지 받게 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는 IMF체제이래 4대부문 구조조정을 시장지상주의적으로 실시하고 공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기획 아래 알짜공기업들을 국내외에 매각하였다. 노사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여 신자유주의 효율성 개혁의 도구로 삼고 정리해고 등 유연화 전략 요소들을 법제화하였다. 이 결과 60%정도의 비정규직(노동부 56.6%)을 양산하였고 20 : 80의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만들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 한국, 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를 맞고 불안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김대중정권으로부터 아니 한국 현대사로부터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이슈들을 받아 안고 출발하는 노무현정권은 그 성격과 관

련해서 III기로 구분될 수 있을지 II-3기에 머무르는지는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생산과정과 선거공약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포괄적인 지향성 등으로부터 기대한다면 적어도 김대중 정권과는 구별되는 III기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노정권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병폐를 조절하고 개혁적인 특성을 가미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표방하는 개혁이 이전 정권들처럼 후퇴한다면 단순히 병폐만 조절하는 합리적 신자유주의적 수준에 머물 것 같다. 노사모와 시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노정권은 시민적 민주주의적 권력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나 이 또한 탈색될 경우에는 시민적 권위주의적 권력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 민주화 이행과 관련한 대립구도는 개혁여부 수준을 뛰어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진보 대 보수 담론의 실천적인 일반화가 이룩될 모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이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주체적인 역량에 보다 크게 달려 있는 부분이다.

노정권은 사회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조절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정세는 권력에게나 사회운동 진영에게나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라크와의 열전을 시작으로 미국의 패권주의가 폭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을 것이다. 세계체제가 당분간은 더욱더 미국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며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이 증대될 것이다.

3. 사회운동의 민주적 발전과정과 특징

한국의 사회운동은 정세 변화와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국 사회는 근대적인 모순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전근대적인 잔재도 상당히 중첩되어 있다²⁾. 따라서 사회구성 자체도 다분히 중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는 정세 흐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사회적인 전근대성을 다분히 보유하고 정치권력과 자본은 이 점을 해소해 나가는 커녕 오히려 활용하여 권력과 자본의 재생산에 악용해 오고 있다. 권력은 파시즘화, 권위주의화하고 자본은 독점화, 천민화, 정실화해왔다. 중첩되어 있는 모든 모순과 갈등의 극복은 온전히 민중과 시민의 몫으로 되어왔으며 국민대중은 이 몫을 수행하기 위해 피와 땀으로 뒤흔뒤흔 희생, 헌신, 봉사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감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90년대를 지나면서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자연과 함께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는 과정이 희망과 기대의 길이라고 믿는 실천가들이 모두 함께 하는 한 그 길은 그렇게 멀지만은 않을 것도 같다.

먼저 사회운동의 발전과정을 구분짓기 위해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역사발전과 민주주의를 대응시키는 방식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에

올로기의 발전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민주주의의 실천적 발전과정을 절차적 민주주의 - 내용적 민주주의 - 실질적 민주주의의 민주화 3단계로 규정하고자 한다. 1단계는 3권 분립과 주권재민 사상이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내용적 민주주의는 3단계로 나아가는 전향적 수준의 민주주의 즉 절차수준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내용적 담보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3단계는 무소외, 무차별, 무속박, 무억압, 무격차, 무결핍이 삶 속에서 관철되는 높은 차원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칭한다. 1단계가 최소 요구 강령의 수준이라 한다면 3단계는 최대 강령에 접근하는 수준이며 이후 노동해방, 빈민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본질적인 수준으로 차원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민주화 단계를 사회운동 발전과 대비시키면 민주화 1단계에서는 사회운동이 권력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견제와 균형자로 역할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사회운동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중심동력이 되는 단계일 것이다. 3단계는 사회운동이 사회와 구조적 실질적 통일체가 되는 단계로서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는 해방운동으로 일체화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단계일 것이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볼 때 I-1, I-2기는 민주화시험(역량 축적)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II-1, II-2, III(II-3)기는 민주화 1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 민주화 준비(역량 축적) 단계

이 단계는 I-1과 I-2기를 포괄하고 있

2) 이러한 중첩성으로 인해 사회에 만연하는 현상은 천민자본주의, 정실자본주의, 파시즘, 권위주의, 보스주의, 남성중심주의, 집단주의, 배타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학연주의, 정실주의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발목잡고 사회운동의 역동성도 저해하고 있다.

으며 사회운동 특히 민중운동진영이 군부와 시중적 총자본의 지배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던 시기이다. 12.12 쿠데타로 권력기반을 구

된 민주화 역량이 결합하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호헌조치에 대해 종교인, 교수, 사회운동가들이 저항의 흐름을 만들고

표 3. 시민, 민중운동의 거시적 발전과정

	민주화 준비 단계		민주화 1단계		
	I-1	I-2	II-1	II-2	III(II-3)
시민 운동	새로운 시민운동의 태동 (저항적시민운동)	시민사회의 조직화 (저항적시민운동)	시민운동의 분화 다양화 (저항·개혁적시민운동)	시민운동의 개혁 드라이브 (저항개혁적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개혁 이니셔티브
민중 운동	대중적 민주화운동의 조직화 (변혁적 반파시즘운동)	계급적 대중조직의 건설 (변혁적 반파시즘운동)	민중운동조직의 재편 (민주적 기본권 생존권 쟁취운동)	민중운동의 정치 세력화 실험 (민주적 기본권 생존권쟁취운동)	민중운동의 정치 세력화 착근
운동 전체	민중·시민운동의 분화 모색기	민중·시민운동의 조직적 분립기 (사안별 부분적 연대)	민중·시민운동의 이념적 차별화기 (사안별 통합적 연대)	민중·시민운동의 연대 조직화기 (정책단위의 통합적 연대실험)	시민·민중운동의 정치세력화 (진보적 정당운동의 차별화)

축한 신군부의 정권찬탈 작전인 5.18내란에 대한 광주민중항쟁이 이 준비단계의 포문을 열었으며 이후 대학생들의 정치사회적 변혁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정투쟁,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보장투쟁, 도시빈민들의 생존권투쟁, 해직기자들의 복직과 언론개혁운동, 교수와 지식인들의 정치사회적 민주화운동, 교사들의 교육운동 등이 정권을 압박하고 퇴진을 요구하였다. 한편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남녀불평등문제가 사회의 반민주적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인식 아래 당시까지의 보수적 여성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진보적 여성운동의 지평을 열기 시작했다. 누적된 모순과 축적

민통련과 국민운동본부가 투쟁의 중심을 이루어 6.29선언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I-2기를 지배한 노태우 정권은 수립되자마자 I-1기 즉 전두환 정권에 대한 심판을 사회운동으로부터 강력하고 요구받고 청문회란 절차를 통해 전두환 정권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을 하고 권력장악과정의 부당성, 폭력성, 반란성을 낮은 수준에서나마 공식화하게 되었다.

6월항쟁에 이어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현장투쟁이 노동자대투쟁으로 모아지고 이것이 현장민주화투쟁과 민주노조건설투쟁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노동조합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남성중심의 대사업장에서

흐름을 주도한 민주노조운동은 최초의 민주노조 연맹체인 전노협을 출범시키고 권력(3당합당)과 자본(자본가 단체의 연합)을 긴장시키며 이후 민중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 87년의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대항세력의 조직적 결집을 활성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야별 시민운동 단체와 부문별 대중단체의 건설이 잇달았다.

이 시기에는 한총련 대학생들과 통일운동가들이 본격적인 저항적 통일운동을 범민족대회로 모으면서 펼치기 시작하고 변호사, 의사, 약사, 치과의사, 연구진 등의 중간층이 사회운동의 분야별 역할을 담지하고 나서며 새로운 종합적 시민운동체인 경실련이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시민운동은 6월항쟁과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우리사회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며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역을 개척하여 담당하였으며 이는 서구에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시민운동이 재활성화되는 것과 일면 궤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선운동의 새로운 결집체인 전민련이 89년에 출범하고 90년 보수대연합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계급대중조직의 전선체인 국민연합이 90년에 결성되어 정파와 대상이 다른 전선체가 양립하게 되었다. 이후 이 양 전선체는 전국연합으로 통합되어 반파시즘공안정국분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을 선도하였다.

이 준비단계의 민중운동의 성격은 변혁적 반파시즘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전기(I-1)는 대중적민주화운동의 조직화기, 후기(I-2)는 계급적 대중조직의 건설기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성격은 저항적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전기(I-1)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태동기, 후기(I-2)는 시민사회의 조직화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 전체로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가 탐색되고 조직적으로 분립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양 운동진영이 사안별로 부분적 연대를 아주 낮은 수준에서 모색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5.16쿠데타 이후 최초로 진보세력의 선거참여운동이 시작되었다. 즉 독자후보전술과 진보정당운동이 그것이다. 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 독자후보를 주장하던 그룹이 백기완씨를 후보로 내세워 선거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사회운동 일부세력이 88년 총선 때 한겨레당과 민중의당을 결성하고 이후 한겨레당으로 통합하여 총선에 참여하였으며 90년에는 민중당을 결성하여 92년 총선에 참가하였다. 이 시기의 독자후보추대와 진보정당 운동은 실패하였으며 그 정신은 부분적으로 이어졌지만 운동체 자체는 포말화하였다. 특히 민중당의 핵심간부들이 뒤에 집권 신한국당에 포섭되어 보수정당의 전위당원화하자 진보정당운동의 정체성 위기가 초래된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2) 민주화 1단계

3당합당과 이면합의를 통해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장악한 김영삼 정권(II-1)은 사정정국과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출발하였으며 개혁의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부정부패청산과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고 군부개혁, 금융개혁, 신경제개혁 등을 추진하였으나 개혁의 이념과 지향성부터 사

표 4. 사회운동의 시기별 주요 이슈

민주화 준비단계		민주화 1단계		
I-1	I-2	II-1	II-2	III(II-3)
반군부파시즘운동 직선제 개헌 운동 생존권 쟁취 운동	반군부파시즘 운동 약법철폐 운동 생존권 쟁취 운동 신사회 운동 지방자치제확보운동	반신자유주의 운동 반세계화 운동 과거청산 운동 생존권 쟁취 운동 약법개폐 운동 인권보호 운동 환경보존 운동 여성주의 운동 언론개혁 운동 온전한 지방자치 운동	반초국적자본 반지구화 실천 운동 반민영화 공공성쟁취 운동 반전평화 운동 노동권생활권쟁취 운동 약법개폐 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환경개선 운동 정치적 시민운동 여성권익확보 운동 지방분권자치 운동 언론개혁대안 운동	반전한미평등쟁취운동 평화통일 한반도 비전제 시 운동 신자유주의적 개혁 조절 운동 공공성제고 공익화쟁취운동 정치참여와 세력화 운동 생활권쟁취 운동 공공적참여제도 쟁취운동 지속가능사회발전확보운동 생명인간존중운동 여성권익확보운동 언론컨셉트 전환 운동 지방분권 자치운동

회운동의 그것과 차이를 드러냈다. 초기에는 사회운동일반이 상당한 밀월기간을 가졌지만 김영삼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신자유주의적 신경제개혁의 반노동자성이 이 밀월을 깨뜨리게 되었다. 신경제, 신노사관계에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세계화와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체결에는 반세계화운동과 농업농민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과거청산과 약법개폐를 요구하는 국민적 사회운동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지배집단은 오히려 이승만 영웅화 작업과 박정희 되살리기 사업을 획책하였다. 기층민중들의 생존권 쟁취운동이 새로운 각도에서 더욱 치열해졌으며 전노협, 대공장노조회의, 사무직노조 연대회의 등이 총단결하여 출범시킨 민주노총이 전체 사회운동의 전위로서 자기역할을 담지하게 되었다. 진보적 종합시민운동단체

인 참여연대가 창립되어 민중운동과의 연대의 고리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며 진보적 인권운동, 전향적 환경운동, 본격적인 여성주의운동, 언론개혁운동, 통일운동, 지방자치운동이 전개되면서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총체적인 양상으로 확산되었다. II-1기에서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검찰을 통해 묵살하려다가 5.18학살자 처벌특별법제정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95)로 결집된 시민, 민중, 지식인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분노에 찬 요구에 굴복하여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신군부를 단죄하였으며,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96년 연말에 날치기 통과하였다가 기층민중과 국민들의 분노로 일단 철회하는 상황도 있었다. 아무튼 이 시기의 사회운동은 사안별로 통합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 일정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국민의 정부(II-2)는 IMF지배체제를 이겨나간다는 명분 아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민영화, 규제완화, 유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고용의 비정규직화, 공공성의 축소, 분배의 악화 등을 초래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켰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은 미완에 그치고 대신 과거청산과 남북관계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다. 사회운동단체들은 연대해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중생존권쟁취 사회개혁 및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잇달아 결성하여 저항운동을 강하게 하였다.

이 IMF반대 범국민운동 이후에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각각 별도로 연합체를 만들어가게 된다.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반대를 위한 전선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거쳐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을 결성하고 이제 본조직 건설로 나아가고 있다. 시민운동은 일부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지지 입장을 가지기도 하였고 보수적 시민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층위 분화가 본격화하였으며 총선시민연대운동과 대선유권자연대운동으로 정치적 시민운동을 지평을 열기도 하였다. 시민운동은 높아진 위상과 확대된 역량을 총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시민운동의 종합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후기에 들어와서 사회운동은 연대와 공유작업을 한차원 높이게 된다.

2001년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탄압과 단병호위원장의 구속에 반대하여 288개 단체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9.11테러 이후에는 700개 단체가 반전평화 시국선언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단체 정책협의회가 주요 시민, 민중단체들의 참여로 가동되었다. 2002년 발전, 철도, 가스 노조의 연대파업과 '연대와 성찰:사회포럼2002'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민중단체간의 정부의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개혁에 대한 입장차이에 관해 접근토론을 시작하고 특히 공공부문의 발전과 공공성 문제를 주요 이슈로 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주요 시민, 민중단체들 15개가 모여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II-2기에서는 평화통일운동이 반체제내화하여 폭넓게 펼쳐졌으며 6.15정상회담 이후 통일운동단체들은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를 만들어 반전평화통일연대운동을 펴고 있다. 통일운동은 관변신설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로부터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범민련 등까지 그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II-2기의 2002년은 전체 운동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몇가지 조짐을 보였다. 월드컵기간 동안의 '붉은악마'로 상징되는 청년학생들의 새로운 집단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문화, 노무현 정권을 창출하는 밑거름 역할을 한 새로운 정치선거운동의 전형을 세운 '노사모' 운동, 그리고 심미선, 신효순 양을 애도하고 미국의 공식사과와 소파재개정을 위해 11월 30일부터 연일 열리는 '촛불시위' 운동 등은 2003년부터의 사회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II-2기까지의 민주화 1단계과정을 사회운동 시각에서 종합해보면 민주운동의 성격은 민주적 기본권, 생존권 쟁취운동이었으며 II-1기가 민주운동조직의 재편기였다면 II-2기는 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 실험기였다. 시민운동의 성격은 저항·개혁적 시민운동이었으며 II-1기가 시민운동의 분화다양화기였다면 II-2기는 시민운동의 개혁드라이브기였다고 본다. 사회운동 전체적으로는 II-1기가 시민, 민주운동의 이념적 차별화기였으며 II-2기는 시민, 민주운동의 연대 조직화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II-1기가 사안별 통합적 연대기였다면 II-2기는 정책단위의 통합적 연대 실험기라고도 할 수 있다.

진보적 정당운동도 다양화하고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15대 대선을 위해서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이 만들어지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민주노동당으로 재창당되어 16대 총선에 임하였으며, 16대 대선에서는 권영길 대선후보를 다시 내세워 진보정당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진보정당 자체도 이념에 따라 나뉘어 청년진보당을 개명한 사회당의 정당운동이나 녹색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당의 정당운동도 시작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민주화 1단계로서의 2003년 이후

노무현 정권은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과 국민참여정부라는 개념으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민

중운동단체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참여연대, 민변, 문화연대 등 14개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정치개혁연대)를 결성하고 여야정당에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제안하여 각 정당의 개혁파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상태이다. 이것은 주요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정치개혁시민운동을 펴고 나아가서 정치세력화구상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아무튼 노무현 정권은 시민운동을 정치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안고 시작되는 III(II-3)기는 미국의 패권주의 폭발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조절하고 사회 제 부문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종합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득권 세력과 총자본의 장벽과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와 정책수단을 가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사회운동은 반전평화한미불평등 해소 쟁취투쟁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제시운동을 필두로 하여 공공성제고 공익화 운동, 생활권 쟁취운동, 공공적 참여제도 쟁취운동을 전개해야 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확보 운동, 생명인간 존중 운동, 여성권익 확보 운동, 언론컨셉트전환운동, 지방분권 자치 운동 등을 아울러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III(II-3)기에는 민주운동은 정치세력화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한차원 높은 진보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시민운동은 개혁이니셔티브를 쥐고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이루고 자연과 함께 삶의

표 5. 사회운동의 성장과 연대운동

	I-1	I-2	II-1	II-2
주요운동 단체	민주언론운동 협의회(84) 공해문제 연구소(82) 여성민우회(87) 여성운동 단체연합(87) 전국교사 협의회(87)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 협의회(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 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88) 공해추방운동연합(88) 전국강사협의회(88)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89) 전국교사노동조합(89) 전국노동조합 협의회(90) 전국농민운동연합(90) 전국빈민연합(90) 학술단체협의회(88) 한총련,인의협,건약 범민족연합(91)	참여연대(94) 환경운동연합(93) 녹색연합 민주노총(95) 6월사랑방 민족화해 자통협(94) 인권운동 사랑방(93)	교수노동조합(01) 공무원노동조합(02) 사회진보연대(00) 노동자의힘(01) 민화협(98) 지방분권국민운동(02) 문화연대(99)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98) 함께하는시민행동(99) 전국불완전노동 철폐연대(02)
전선운동 및 연합운동	민족민주통일운동연합 (85) 국민운동본부(87)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89) 민자당1당독재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 한 국민연합(90)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 연합(92)	5·18학살자처벌특별법 제정범국민비상대책위 원회(95) 노동법안기부법개정 회와민주수호를위한범 국민대책위원회(96) 한국시민단체 협의회	IMF대응범국민 운동본부(98) IMF반대범국민 운동본부(99) 민중대회위원회(00) 전국민중연대(준)(01)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01) 통일연대(01) 공공부문 정책협의회(02) 정치개혁연대 (03.1.17))
진보정당 운동	백기완 대통령후보 선 거대책본부(87)	한겨레당(88) 민중의당(88) 민중당(90)	민주와진보를위한국민 승리21(97)	민주노동당(99) 청년진보당(99) 사회당(01) 녹색당(02)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운동 전체로는 시민·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가 가일층 진전되고 진보적 정당운동의 분화와 차별화가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II-2기에 본격적으로 실험되기 시작했던 민주운동과 시민운동의 통합적인 연대를 통한 사회운동의 승화가 민주화 1단계를 마무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II-1기에

서는 사안별로 통합적 사회운동연대가 이루어졌지만 II-2기에서 정책적 통합적 사회운동의 실험적 연대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사회전반적인 균형잡힌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통합적 사회운동이 펼쳐져 우리 사회의 제부문과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총체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4. 새로운 통합지향적 사회운동의 재구성과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1) 21세기 사회운동의 핵심과제와 영역별과제

21세기 사회운동의 핵심과제는 먼저 민중운동은 민중운동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며 독자적 과제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며 영역, 접근방법 면에서 상대성을 가지면서 이 두 운동이 사회진반에 걸친 민주적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공동투쟁의 영역을 발전시키고 공동목표(강령), 실천방안, 실천행동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포괄적 다층적 민주주의 전선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진보적 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전술을 공동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반제·반정부)운동을 통해 자연발생적 대응체제의 진화와 발전을 피하고 나아가 자본공세와 전쟁위기에 대한 공세적 전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세적 구조조정 반대론을 뛰어넘는 반신자유주의 전략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조합주의와 분산적 정파대립을 극복함으로써 힘의 분산을 막고 유연성 제고와 사회적 컨센선스 확보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이슈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적 헤게모니 전략을 구사하여 시민운동과의 전략적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고립을 극복하고 역량을 배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정파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블럭을 형성하여 분산된 정치세력화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적 구조개혁에 시민일반, 여성, 환경, 언론 등의 부문에서 개혁적 시민운동이 자리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시민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공공지향의 개혁을 명백하게 구별하여 시민운동적 개혁의 종합적 지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언론활동 중심보다 대중활동의 과제를 보다 폭넓게 수행하여 대중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과 사회발전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운동과의 공유와 연대가 필요하고 정치사회적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정치적 독립의 조건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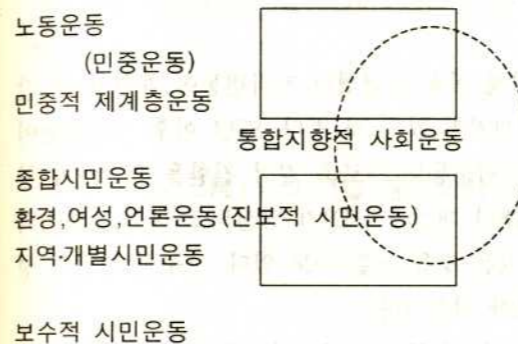
2) 새로운 통합지향의 사회운동의 재구성과 정치세력화

앞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객관적 상황이나 주체적 과제면에서 한국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각자의 운동정체성의 문제와 일상적 운동지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 차이를 전체운동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역동적 통합지향적 성격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객관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통합지향의 객관적인 가능성은 첫째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민주화 운동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공유되는 지점을 갖고 있다. 둘째는 서구의 집단이기주의적 운동과는 달리 우리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은 공공적 저항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운동간에 상대적으로 약한 대치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생성 발전하였으며 시민운동은 종합성과 전국·정치 중심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넷째는 한국의 정치경제와 사회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면이다. 점진적 개혁성과 누증의 한계 -> 직접적 세력관계

에 의해 좌우되는 개혁성과의 존재방식 -> 시민, 환경, 여성 등 개혁운동영역의 분화와 성층화.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진전의 급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폐해가 일시에 거의 모든 계층에 전면화함으로써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판단차이가 협소해져 공동대응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다층적 운동구조에서 통합지향적 사회운동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통합지향적 사회운동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속력 강화보다는 민주성, 개혁성,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동목표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운동단체들간에 상충부의 이해 심화와 저변 합의의 확대에 기초한 전술적인 공동목표를 구조적 민주개혁의 징검다리로서 '일반민주주의 개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목표의 설정과 통합지향적 사회운동 구조 수립을 위해서는 두 운동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채널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구조를 통해 운동내외의 정세를 공유하고 문제인식의 기본틀을 서로 이해하고 공동목표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관련영역별 논의를 교차하여 수행해 나가면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통합지향적 사회운동구조를 만들면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포괄적인 정치세력화 방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들어가야 한다. 최근 운동의 분화 속에서 일정한 성과와 더불어 진보진영 내부의 정치세력화가 커다란 왜곡현상에 봉착하고 있는데 특히 개별·분산화된 정치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세력화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진보적 사회운동 전반의 정치적 비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 조건 변화를 사회운동에 조직적으로 유리하게 재배치할 수 없는 한계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재편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은 독자적인 포괄적 정치세력화 방침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교수7단체(2002), 2002년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2 대선 교수네트워크.
 김상곤(2001), 권력재편기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 개혁과 연대의 과제, 동향과 전망 2001년 가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김상곤(2002), 새로운 세기 한국사회운동의 발전조건과 과제, 연대와 성찰 : 사회포럼 2002.
 김상곤(2002), 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 사회경제 포럼 19호, 한국사회경제학회.
 노기연(2002),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의 현황과 과제 - 노기연 창립 11주년 기념토론회자료집.
 민교협(1997), 월보 모음집.
 민주노총(2002),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자에게 무엇을 남겼나?, 정책보고서 2002-11.
 (사)참여사회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2001), 전환기의 한국사회,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기타 주요 시민,민중단체 홈페이지.

<전체토론2>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발제2

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

김준(광주참여자치21 시민교육센터소장, 목포대)

1. 지역운동과 지역정치 그리고 지역성

16대 대선 이후 한국사회는 지난 87년 6월 항쟁 이후 경험했던 지각변동이 재현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변동은 시민사회라고 비껴가지 않을 것 같다. 87년 이후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지형이 등장했던 것처럼, 시민운동도 새로운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지금 많은 활동가들은 지난 1998년 대선에서 DJ가 당선되고 나서 광주지역의 사회운동단체들이 가졌던 심리적 공황(?)과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다. 노무현 정권의 성격 규정과 시민사회의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제대로 지역운동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는가 싶다. 만약 대선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지역의 자치와 참여는 실종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제대로 지역정치를 개혁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지역정치를 복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운동은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주민에게 다가서는 운동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제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복원되었지만 여전히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의 수용과정에서 갈등과 불신은 반복되어왔다. 이는 자치제도는 복원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역정치가 복원되지 않고 중앙정치에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역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정치의 복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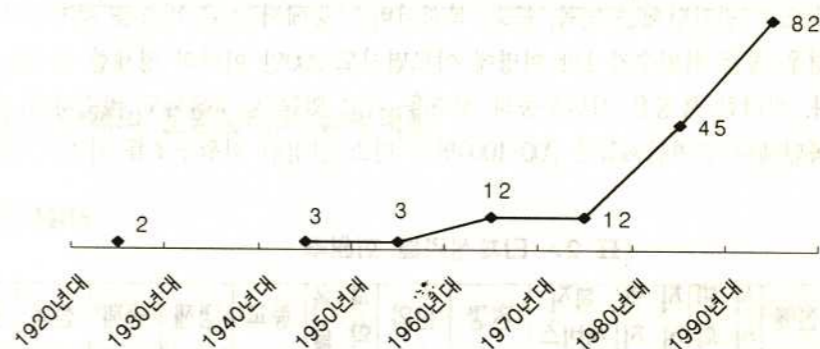
광주 지역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카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를 중심으로한 농민운동의 중심이었다.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지역운동(농민, 노동, 주민, 통일운동 등)과 지역정치는 오월운동이라는 동일한 이슈와 요구를 가지고 같은 행보를 걸었다. 1987년 6월항쟁은 지역정치와 지역운동의 최고의 공생기였으며,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운동과 지역정치는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광주의 지역운동은 1980년대 후반 민족민주운동(재야운동), 5월운동, 시민운동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시민운동이 지역운동에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지역의 시민운동을 단체의 운영실태, 운동의 내용, 지역정치와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2. 광주지역의 사회운동의 지형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기구나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기구를 제외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적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를 말한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민간단체는 1903년 서울 YMCA를 들 수 있으며, 광주는 1920년 광주 YMCA, 1922년 광주 YWCA의 설립이 효시이다. <그림 1>은 1920년대 이후 광주지역 민간단체의 시기별 결성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1950년대까지는 YMCA, YWCA 등 종교적 계몽단체와 한국노총,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직능단체들이 주로 결성되었지만, 1980년 이후에는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단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 현재 광주지역 사회단체의 64.2%가 1987년 이후 결성된 조직들이며, YS와 DJ집권기에 82개가 결성되었다.

<그림 1> 시기별 광주지역 민간단체 결성현황(1999)



시민·사회단체를 성격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식민지 시기에는 종교적 단체와 친목단체, 직능별 단체들이 결성되었으며, 해방 후 1980년까지는 밀알회, 홍사단, 광복회, 국제로타리 등 친목과 자원봉사 성격을 띤 단체와 관변단체가 결성되었다. 신군부 집권 초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이, 후반에는 바르게살기협회의 등의 관변 조직들이 결성되었으며, 광복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운동의 성격을 띤 시민단체와 지역복지관련단체(시설)들도 결성되었다. YS와 DJ의 민간정권기에는 시민운동적 성격을 띤 시민단체와 지역복지 관련 단체들이 두드러지게 결성된 반면에, 관변단체, 친목적 성격을 띤 조직들의 결성은 둔화되었다.

〈표 1〉 시기별 시민단체결성현황

구분	전체	시민 사회	지역 자치	복지 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 학술	종교	경제	국제	친목	관변
BASE FOR %	152	57	1	26	16	8	3	5	2	1	7	26
식민지시기	2.6	3.5		3.8							14.3	
권위주의기	17.8	19.3	100.0	11.5	6.3	25.0	33.3	60.0			42.9	11.5
신군부기	41.4	38.6		42.3	25.0	25.0	66.7	20.0	50.0		28.6	65.4
민간정권기	38.2	38.6		42.3	37.5	50.0		20.0	50.0	100.0	14.3	23.1

광주 민간단체의 회원은 〈표 2〉 과 같이 평균 4천 4백 여명에 이른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환경단체로 그 중 '무동산보호단체협의회'가 15만 명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순이다. 회원의 규모별로는 500인 이하의 회원을 가진 민간단체가 50%에 이르며, 200인 이하의 회원을 가진 민간단체 조직들 환경운동단체들이 43%로 가장 많으며, 시민단체가 35%에 이르지만, 관변단체는 7.7%에 불과하다. 5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민간단체는 친목, 문화, 복지서비스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경우 평균 회원수가 1만 여명에 이르면서도 200인 이하의 영세한 회원을 가진 단체들이 많다. 이러한 특징은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친목단체나 관변단체들은 200-1000명의 다소 안정된 회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2〉 단체성격별 회원수

구분	전체	시민 사회	지역 자치	복지 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 학술	종교	경제	국제	친목	관변
BASE FOR %	152	57	1	26	16	8	3	5	2	1	7	26
100인이하	7.2	14.0		3.8	12.5							7.7
101-200	17.8	21.1		7.7	31.3	25.0	33.3	20.0	50.0	100.0		14.3
201-500	25.0	28.1	100.0	26.9	6.3	12.5		20.0	50.0			34.6
501-1000	14.5	5.3		7.7	25.0	50.0	33.3	20.0				14.3
1001-10000	26.3	22.8		46.2	18.8		33.3	20.0				71.4
10001-100000	8.6	8.8		7.7		12.5						19.2
100001이상	0.7				6.4							
평균(명)	4412	3942	218	2461	10183	4818	708	2629	303	200	1565	4266

광주의 민간단체들의 회비의존도는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원구조가 취약한 단체의 경우 10-15%, 일반적으로 30%이하, 회원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실련 등은 50% 정도로 추정된다. 단체별 재정규모는 〈표 3〉 와 같이 연평균 7천만 원이며, 재정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친목성격의 단체들로 연평균 1억4천여 만원에 이르며, 가장 규모가 작은

단체들은 주로 시민운동의 성격을 띤 단체로 연평균 4천 4백여 만원이다.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은 3천만원 이하의 재정규모를 가진 조직이 35-45%에 이르지만, 이렇게 재정규모가 작은 친목단체는 하나도 없으며, 관변단체도 겨우 7.7%에 불과하다. 그러나 5억 이상의 재정규모를 갖춘 단체는 관변조직이 19.2%에 이르며, 친목단체의 경우에도 1억원 이상이 71.4%에 이른다.

〈표 3〉 단체별 재정규모

구분	전체	시민 사회	지역 자치	복지 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 학술	종교	경제	국제	친목	관변
BASE FOR %	152	57	1	26	16	8	3	5	2	1	7	26
1천만원이하	7.2	14.0		3.8	12.5							
3천만원이하	17.8	21.1		7.7	31.3	25.0	33.3	20.0	50.0	100.0		7.7
5천만원이하	25.0	28.1	100.0	26.9	6.3	12.5		20.0	50.0			14.3
1억원 이하	14.5	5.3		7.7	25.0	50.0	33.3	20.0				14.3
5억원 이하	26.3	22.8		46.2	18.8		33.3	20.0				71.4
5억원 이상	8.6	8.8		7.7		12.5						19.2
평균(백만원)	71.39	44.3	744	93.2	59.4	88	84	48.6	75	50	138.6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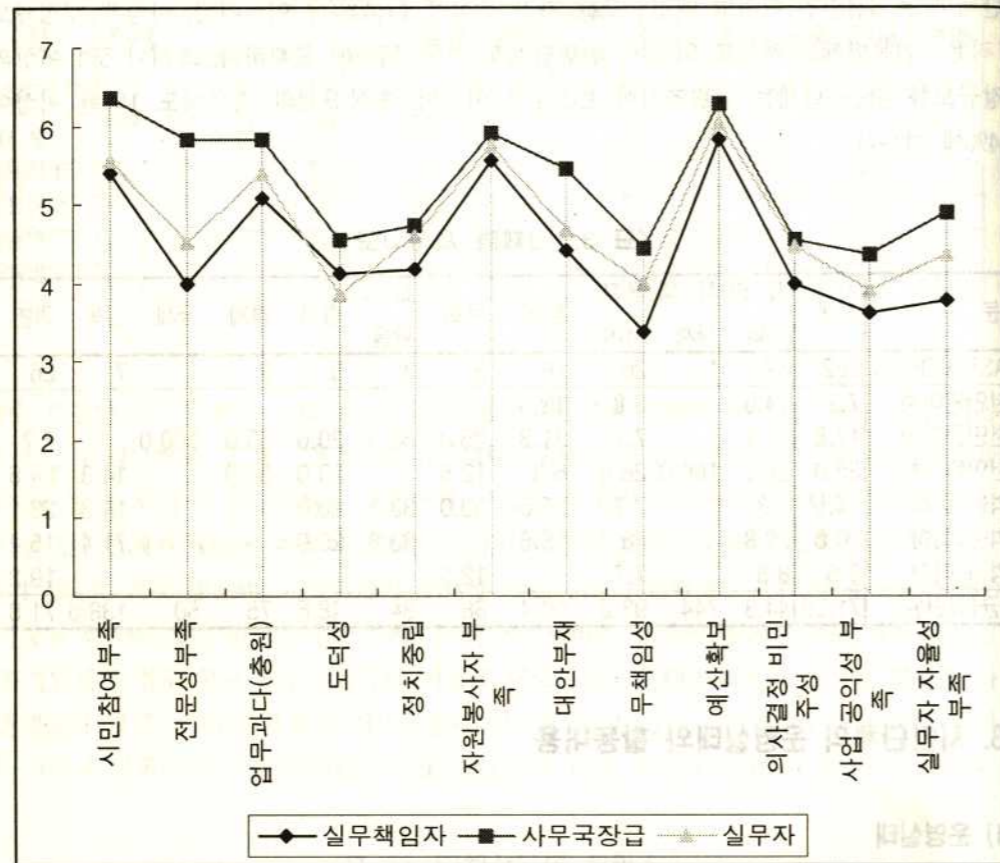
3. 시민단체의 운영실태와 활동내용

1) 운영실태

시민운동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실무자들에게 물어보았다.³⁾ 대체적으로 사무국장 급의 실무자들이 내부의 문제점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다. 우선 시민참여의 부족, 업무과다, 자원봉사자 부족, 대안부재, 예산 확보문제 등은 실무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사무국장과 실무책임자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은 전문성부족, 시민단체의 책임성, 시민참여, 실무자의 자율성 부분으로 나타났다. 즉 사무국장급들은 전문성부족과 시민단체의 무책임성, 시민단체 실무자의 자율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지만 실무책임자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와 실무책임자들 사이에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은 자원봉사 부족과 예산확보로 나타났다.

3) 이 자료는 필자가 2001년 1월 광주지역 시민단체 41개단체 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그림 2〉 시민단체 실무자들의 인식하고 있는 내부 문제점



다음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충원방식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학생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자 활동가들은 학생운동과 개인적인 관심이 시민운동으로 연결되었던 통로였지만, 여자 활동가들은 학생운동과 자원봉사·개인적인 관심이 통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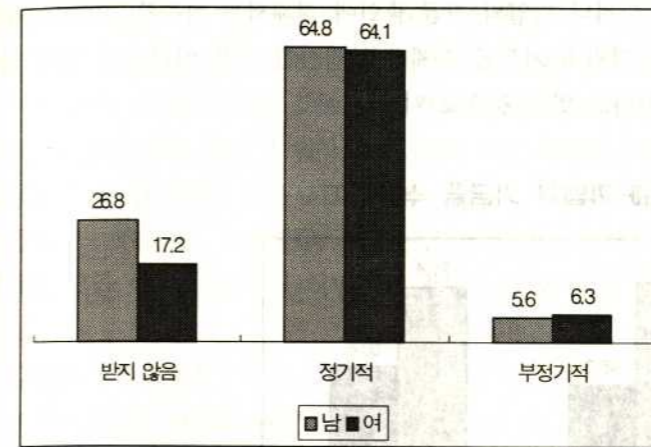
〈표 4〉 시민단체 실무자의 채용과정

구분	학생운동	자원봉사	추천	개인	기타(무응답)
남	33.8	8.5	21.1	25.4	10.3
여	23.4	21.9	18.8	21.9	14.3
합계	28.9	14.8	20.0	23.7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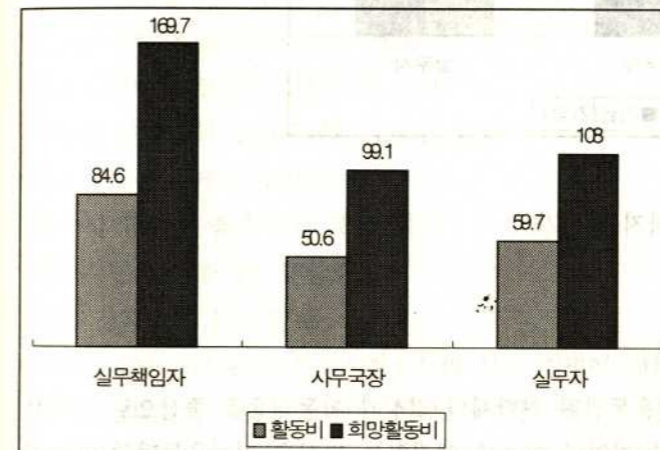
한편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에 대한 급여의 경우, 받지 않는다는 경우도 평균 20%를 넘었

으며, 부정기적이라는 응답도 6%,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응답은 64%였다.

〈그림 3〉 시민단체 실무자의 급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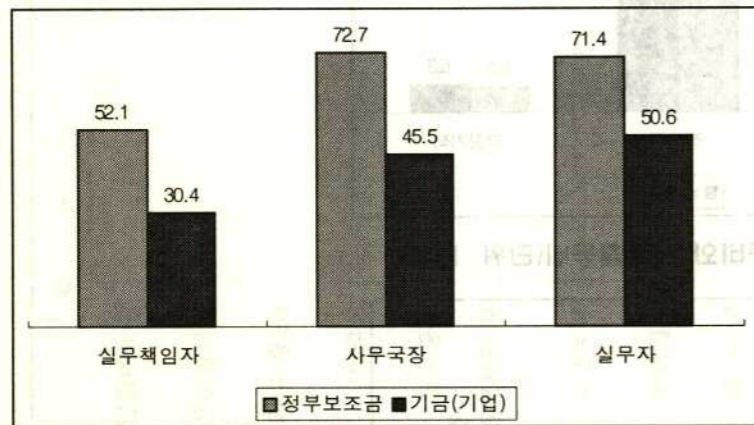
〈그림 4〉 현재 활동비와 희망활동비(단위, 만원)



시민사회단체에 있어서 재정문제는 존재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회원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지역의 사회운동단체들 중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다. 정부보조금은 그나마 투명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운동단체 지도자들의 능력은 자금력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자금의 출처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들의 급여는 실무책임자가 평균 84만원대, 사무국장이 50만원대, 실무자가 59만원대로 나타났다. 사무국장이 실무자보다 적은 것은 단체의 성격상 사무국장이 교통비 정도를 받고 자신의 일을 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이 희망하는 활동비는 실무책임자가 160만원대, 사무국장과 실무자는 100만원대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과 기업의 기금출연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실무책임자에 비해서 사무국장과 실무자들은 사업과 재정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는 매우 부정적이며 사무국장과 실무자들은 기업의 기부금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의 기부금 문화를 고려할 때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시정부보조금과 기업체 기금을 수용하자



시민운동단체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 않는다

2) 단체의 결성과 활동내용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내용은 시민운동관련 연합체의 결성과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역운동단체들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결성과 활동

광주지역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1998년 6·4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각 부분의 대응능력을 키우고, 21세기 지역사회 구심체의 필요성, 이를 위한 시민단체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연대를 위한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998년 12월 광주YMCA,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누리문화재단, 광주 흥사단, 광주 시민연대 등 17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광주시민단체협의회(Kwangju Council of Citizens' Movement : KCCM, 이하 시단협)를 결성하였다.⁴⁾ 조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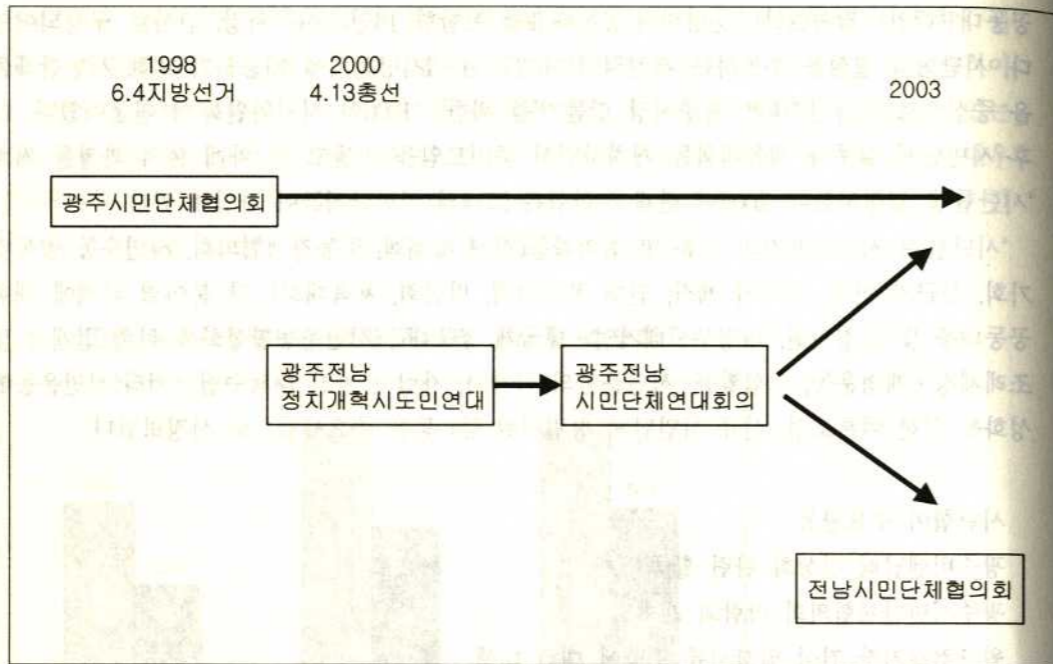
공동대표(7인), 감사(2인), 운영위원(공동대표를 포함한 14인), 사무처장, 간사로 구성되어있다. 시단협의 결성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6·4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좋은 광주시장 만들기'를 위한 '1000인 시민위원회'의 활동이었다. 그 후 시민단체 실무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준비모임을 만들고 몇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시단협'을 결성하였다. 2003년 현재 시단협은 27개의 시민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시단협'은 시민단체간의 교류 및 협의활동(신년 하례회, 공동정책협의회, 시민운동 공동평가회, 상근자 연수, 소식지 제작, 연대 프로그램, 박람회, 체육대회),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간접지원, 대정부·대기업·대국제 공동대응(시민운동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및 조례제정·개정운동, 교섭활동, 시민운동의 국제화, 자립적 발전 대책수립), 기타(시민운동활성화를 위한 여론조성, 신규 시민단체 창립지원 등)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시단협이 주요활동

- 광주비엔날레 정상화 관련 활동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람회 개최
- 월드컵경기장 건설 입찰서류 조작에 대한 대책
- 스크린경마장 설치반대 운동 전개
-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전문강좌 실시
- 무등산 윤림온천 건설반대와 무등산 보호
- 상무신도심 쓰레기 소각장
- 광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광주시민의 날을 5월 18일로
- 조대 장례식장 건설 반대
- 지하철공사, 도시공사, 환경시설공사의 사장 임명에 대한 대책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선임 문제

4) 창립당시 공동대표는 김경천(YWCA사무총장), 김영석(광주흥사단 청소년 위원장, 중앙내과 원장), 김용채(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변호사), 오재일(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운동본부장, 전남대학교수), 윤장현(광주시민연대 대표, 중앙안과 원장), 이수애(광주여성의 전화 대표, 목포대학교수), 정찬용(YMCA사무총장) 등이다.



광주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주도 했던 총선연대 이후 1년여의 준비 끝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01년 2월 창립총회를 갖고 한국사회 개혁운동의 최대세력으로 떠올랐다. 광주전남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했던 광주전남정치개혁시도민연대가 발전적 해체 과정을 거쳐 광주 전남 NGO 최대 상설협의체인 '광주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4월에 결성되었다.

광주전남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인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집중사업으로 정치제도개혁사업, 지방자치개혁사업,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을 집중사업으로 선정했으며 3대 개혁입법(부패방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운동, 교육개혁운동(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운동(정기간행물법 개정,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을 역점지원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연대회의는 총선이후 국회의원 총선자금 실사, 지역NGO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등의 활동을 했지만 소수 단체와 소수 활동가들에 의존해 실질적인 연대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속에 해산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광주전남 연대회의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존속하면서 적어도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성과는 뚜렷이 가지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시민의 소리. 2002.11.2)

첫째는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선거시기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와 현실정치에 대한 시도민의 목소리를 내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적 측면에

서 여러모로 열악한 현실 조건 하에서 분투하고 있는 전남지역 시·군 단위 조직들에게까지 연대의 힘이 미침으로서 연대를 통한 지역운동의 발전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 주었던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해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98년에 창립하여 높은 조직적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의 조직 중복이 문제가 되었다. 개별단체 입장에서 보면 두 번의 회의에 참여하고, 회비 또한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이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상존해 왔다.

둘째, 전남시민사회단체협회가 지난 7월 19일 창립됨으로서 그동안 광주에 의존적인 조직 형태에서 벗어나 전남 지역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광주시민협과 전남시민협이 지역 연대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면 '광주전남연대회의'는 그러면 과연 무엇이나'는 문제 제기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원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결국 조직 해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광주전남연대회의 조직해산 결정은 광주 전남운동의 발전적 조직 분화로 봐야한다.

전남시민협 입장에서 보면 창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의 면모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역운동의 중심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광주 전남의 양 시민협이 지역의 실질적인 연대체로서 자기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분화되어야할 자기 선택이 현실로 나타났을 뿐이다.

광주와 전남의 양 시민협이 연대활동의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이 남아있다.

지역 시민사회 운동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동시에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직적 결합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연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조절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게 떠오를 것이다. 지금껏 광주시민협이 자기 사업 범주로 설정하지 않았던 정치개혁 과제를 새로이 추가함에 따라 원칙과 현실의 문제는 더욱 더 중요한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4. 시민사회의 정치참여와 지역정치개혁운동

1) 지역정치의 현실과 시민사회의 대응

이러한 사례들을 요약해보면 <표 5> 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역 정당(DJ)과의 관계는 1999년까지는 일방적인 'DJ따라가기'였다. 유권자보다는 DJ와 직접 거래했던 1999년의 사례까지만 해도 지역정치와 시민사회(권력)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었

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총선이였다. 공천=당선, '지광이론'으로 불리던 지역정치와 시민사회는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기점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운동을 주도했던 지역총선연대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평가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는 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감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 유권자운동의 정착을 위한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 시민운동의 도덕성 재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4.13총선 정치개혁운동 자료집, 2000).

낙천낙선운동이 네거티브운동의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함께 이후 지역정치의 복원과 자치운동의 필요성을 절감케하는 중요한 성과를 낳았다. 2002년의 지방선거에서 자치연대의 자치와 분권운동, 지방권력 진출은 총선연대의 성과와 반성의 연장선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연대의 부정선거감시운동과 낙선운동을 넘어서 정치참여는 시민운동과 지역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후보자 발굴과 검증 문제점, 다른 후보의 참신성과 개혁성 등에서 차별화에 실패 등은 앞으로 시민사회의 정치참여에서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연대가 내세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자원을 지방이 골고루 되돌려 받자는 취지의 본격적인 분권자치운동, 시민운동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운동, 민주당의 정치독점에 맞선 대안세력화라는 점 등은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5〉 시민사회와 지역정치의 상호관계

	98지방선거	99남구보궐선거	2000총선	2002지방선거
형식	1000인 시민위원회		정치개혁 시도민연대 총선특별대책위	지방자치 개혁연대
주체	시민단체(회원)	재아인사 및 시민운동가 개인	시민사회단체	회원·일부 단체
활동	시장후보 검증	후보추대	낙천낙선운동	선거참여
결과	후보교체요구 및 시민후보 검토	지역정당공천	8명 중 6명낙선	
지역정당 관계	수용거부	수용	긴장, 갈등	경쟁
DJ와 시민 사회의 관계	DJ따라가기	DJ줄대기	DJ와 긴장기	경쟁

2) 지역정치 개혁운동

2000년 정치개혁시도민연대 - 낙천낙선운동

광주·전남의 유권자들은 1980년대 이후 DJ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DJ가 집권하고 난 후, 광주·전남지역의 정치지형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와 재신임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16대 선거에서는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야당일 때도 여당이고 여당일 때도 여당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국회의원회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은 시민단체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국회의원회의 이후 신당창당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권교체 이후 지역정서의 변화와 지역의 발전, 21세기 새로운 정치이념, 정치제도,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권위주의 정치, 패거리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이하 시도민연대)'는 1999년 10월 1일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을 개최하면서 시작되어, 10월 21일 '21세기 개혁정치를 위한 광주전남 국민토론회'에서 '시도민 정치적 결집체 조직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 후 준비기획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거친 후 2000년 1월 14일 광주에서는 창립당시 58개 단체, 전남 26개 단체가 참여하여 '시도민연대'를 창립하였다. 조직은 총회,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정책위원회, 기획재정특별위원회, 총선대책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민연대'는 정치·사회제도의 개혁 국민운동 및 의식개혁, 선거공영제·비민주적 선거제도 개혁 및 공명선거 실천사업, 정치인들 무능, 부정비리 감시와 부패정치 추방, 공직선거의 바람직한 선출기준 제시와 유권자운동, 시민사회지도자 양성, 광주전남의 비전제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에 공천부적격자대상자 발표 및 낙선운동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추진해온 공명선거실천운동을 넘어서 현행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유권자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를 방해해온 선거법 87조 개폐운동을 전개하였다.

창립당일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은 1)역대 군사정권 참여자 중 반민주·반인권 행위, 2)정치인의 기본자질을 의심할 만한 반의회적인 행위, 3)부패행위, 4)의정활동 능력, 5)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6)선거법 위반 행위, 7)재산, 병역, 공약 등 기초조사 등이다. '시도민연대'는 이후 여론조사, 자료수집, 분석, 토론회, 시민제안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공천부적격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결과 총 8명의 낙선 대상자 중 7명이 낙선하였고, 무소속 후보중 화순 보성의 박주선, 해남의 이정일, 남구의 강운태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들은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특히 시도민연대에서는 화순·보성, 해남·진도, 광주 남구를 집중 낙선지역으로 선정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지역의 낙천낙선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유권자의식의 변화다. 총선 결과 공천=당선이라는 과거의 선거행태가 바뀐 것이 큰 성과이며 이는 유권자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 다른 성과로 그 동안 광주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에서 광주와 전남이 연대하는 운동의 틀을 마련했으

〈표 6〉 광주·전남지역 낙선낙선운동

구 분	공천부적격자	낙선대상자	낙선자
총선연대	국창근, 김봉호, 김인곤 김종배, 박상천, 정호선 조홍규, 권노갑	김봉호, 박상천, 한영애 나창주, 이재근, 신순범	김봉호, 한영애, 나창주 이재근, 신순범
지역총선연대 (시도민연대)	총선연대 명단포함함 이영일, 임복진, 배종무 한영애	총선연대 명단 포함 이영일, 임복진	이영일, 임복진

며, 그후 2001년 4월 광주·전남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인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출범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민의 직접적 참여의 저조, 시민단체 참여 저조, 군단위 조직과 결합의 문제, 정치인에 대한 자료 확보 미흡, 지역구 활동 자료분석과 적용의 치밀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2002년 총선과 지방자치개혁연대(자치연대)

자치연대는 4·13총선 이후 2000년 8월 광주의 참여자치21과 남해의 바른자치21이 중심이 되어 경남 남해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지역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000 지역활동가 수련회]에서 비롯되었다.⁵⁾ 이 모임에서 생활정치에 기초한 지역정치 구현, 지역의 정치조건을 존중하는 지역간 네트워크 방식의 연대 등을 내걸고 전국조직화를 결의하였다. 그 결과 2001년 4월17일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총체적 사회개혁을 지향한다'는 목표에 동의한 지역운동가들과 자치단체 정치인들이 공동 발기한 전국단위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 네트워크의 주축은 지역에 뿌리내린 젊은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40여개 단체 270여명의 활동가들이었다. 여기에 김두관 남해군수, 이재용 대구남구청장 등 27명의 개혁성향을 지닌 전·현직 단체장 및 자치의회 의원들이 가세했다.

광주자치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코드로 2001년 3월 1일 발기인대회를 무등산에서 개최하였다. 발기인 선언문에서 "광주자치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잘못된 제도와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다.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확대할 것이며 자치를 바라는 주민의 뜻을 모아 자치현장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

5) 당시 참가자들이 합의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지역정치가 정치의 기초이며 생활정치 구현의 현장임을 확인하고 모범적인 지역 대중사업에 매진한다. 2. 우리는 각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연대하며, 운동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주적 창조적 태도와 자세를 견지한다. 3. 우리는 지역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국적인 정치조직 건설을 공동의 조직적 목표로 하며, 지역운동의 힘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집중해 나간다. 4.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연대 방식의 하나로 우선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5. 우리는 지역 대중사업과 연대에 있어서 우리와 정견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의 개인적 조직적 참여를 보장한다. 6. 우리는 이번 지역활동가 수련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전국적인 지역활동가 회의를 추진키로 합의한다.

울러 개혁성·참신성·도덕성을 갖춘 자치후보를 발굴하여 제도권 지방자치영역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후 준비과정을 거쳐 11월 28일 광주전남자치연대는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치연대의 사업은 첫째, 지방자치제도 개혁운동으로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권화시키는 운동과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확대하는 것, 둘째, 당면 사업목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방권력에의 진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도와 사람을 바꾸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표방하였던 것이다. 한편 광주·전남 민중연대회의와 자치연대는 2002년 3월 '자치와분권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운동본부' 발기인 대회를 갖고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후 자치연대는 5개구에 구별자치연대를 조직하였으며 시장과 구청장(서구), 그리고 시의원과 구의원을 후보로 선정하였다.

자치연대는 지난 92년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이문옥 실험'을 제외하면 그 동안은 지역패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DJ당'과 협상을 통한 수혈방식에서 이제는 기존 정당과 정면대결은 물론 대안세력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과거와 명백히 차별화된 운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정권교체와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등은 '공천=당선'이나 '미워도 다시 한번'이 통용될 여지가 없어졌으며 국민의 정부의 개혁후퇴, 지역역차별 논란 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으로 인해 내년 선거에서는 지역민들이 더 이상 DJ나 민주당에 연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정착해가면서 지역민들의 자치와 분권 의식도 높아져 중앙정치의 논리가 아닌 지역정치의 논리가 통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지역의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자치연대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함께하지는 않았다. 한 재야원로의 "해야된다. 된다, 안된다 하기보다는 선각자적인 운동차원에서 좋다.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입장에서 괜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결과에서 참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개혁의 싹으로 보아주면 좋은데..."라는 말은 이를 대변한다. 실제로 자치연대가 '삼고초려'를 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치세력'의 광범위한 '비민주당 연대'를 구축하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추위(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와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회의와 조직적인 연대를 맺는 것에도 시민사회 내부에서 지역현안을 꺼안고 간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표만을 의식한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시민의 소리, 2001.11.30)

광주전남 자치연대의 내부평가에 의하면 "광주전남 자치연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치운동 방식의 시도로 지방선거 참여전술을 채택하고 후보를 내었다. 39명이 후보로 출마하여 13명이 당선되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선거 참여과정을 통해 성과 못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외부적으로 정치개혁이라는 과제의 중요성 못지 않게 조직 내적인 준비과정과 역량 역시 동일한 비

중으로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알았다. 주장이나 구호가 아닌 정치개혁의 진정한 실천력은 내적인 준비가 보다 더 철저했을 때 진정한 힘으로 발현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⁶⁾

6.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정치개혁으로

광주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재정문제, 회원확보 및 참여의 문제,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활동가의 재충원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광주 시민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0-30%내외이며 회원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단체는 50% 정도로 추정된다. 국가의 민간단체보조금이 시민단체에게 확대되면서 재정적 압박으로부터 다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회비에 의한 자립도는 낮아졌다.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민간단체의 보조금이 시민단체의 활동영역 축소와 민간단체의 재정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것만은 부인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회원확보 문제이다. 광주는 서울에 비해 규모가 작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기금이나 회원증원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각 시민단체의 실무자에 가까운 핵심회원들은 몇 개 단체의 겹치기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 배가운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각 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진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풀뿌리 회원구조를 구축하는 일밖에 없다. 풀뿌리회원을 구축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반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풀뿌리 회원의 구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의 경우 그 동안 여론주도층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몇 개의 단체들이 최근들어 일반회원을 기축으로 하는 조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문이 일반시민에게 보다 폭넓게 개방될 것으로 보여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6) 6.13 지방선거의 평가(광주전남 자치연대 6.13지방선거 내부평가)

- 민중연대와 제휴하여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운동본부' 를 결성함으로써 범 민중적인 진영을 포함한 지방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은 유의미한 시도였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양 진영은 내용적인 통일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의 미숙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보다는 오히려 선거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거센 반발이 역대 어느 지방선거 보다 거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힘이 6.13선거에서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지지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 새로운 정치개혁을 담은 차별적인 정책이 미흡했다. 개혁세력을 표방하면서도 다른 후보들과 인물과 정책,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차별성이 부족했다. 이는 내적역량의 준비과정과 더불어 향후 사활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새로운 개혁적 세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미흡했고 후보자간 컨셉의 통일성과 지원, 보다 엄격한 규정의 적용이 미흡했다. 이는 향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할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아직은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극소수이고 그나마 이들 또한 대중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정치개혁을 위한 새로운 대안세력을 힘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상적이고 일상적인 지역활동가들을 준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대안 세력을 만들어 가야한다.

세번째 시민단체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이다. 그 동안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시민단체 내부에서조차도 조직의 운영을 둘러싸고 민주적 방식보다는 소수 핵심활동가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다. 물론 70-80년대 사회단체의 운영방식은 소수 핵심활동가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시민단체가 개방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시민)가 중심이 되는 운영방식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소수의 핵심가에 의한 조직 운영방식은 시민단체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될 것이다.

네번째로 활동가의 충원문제이다. 1990년대 후반이후 시민단체의 활동가를 충원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분 시민단체의 핵심적인 실무책임자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실무자들이 업무를 이양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실무자들은 기존의 실무자들과 사고방식이 다르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더 이상 당위성으로 그들에게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일'을 요구할 수 없다.

여섯째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시민단체의 업무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의 경우 무등산 보호, 광주천을 살리기, 예산감시운동, 부정부패감시 등 공공의 영역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도 무임승차(free-ride)로부터 회비, 자원봉사, 격려지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가 대안을 갖는 지역사회의 경영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단체와 행정, 시민단체와 대학을 연계시키는 시민단체 주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시민단체의 활동가 재교육, 정보제공, 도서관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간의 활발한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들의 다양각색의 담론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지방으로 연결된 시민단체들의 경우 파트너 선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역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중앙의 단체가 지역에 파트너를 잘못 선정해 무리를 일으키거나 지역에서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지역시민단체들의 운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시민운동의 논리와 지역시민운동의 논리는 상당히 상이한 측면이 있다. 이에 중앙은 지역에 자신의 논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지역에서도 중앙의 논리를 비판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운동의 아젠다를 개발해야한다.

이번 대선 결과 나타난 가장 큰 화두는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이 화두는 2004년 총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개혁을 정치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정치도 예외일 수는 없다. 30여년 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 민주당, 지역정치를 독점해 왔던 민주당에 대한 개혁을 남의 일로 방관할 수 없다. 이미 서울에서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를 발족

했으며, 총선연대와 대선연대에 이어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치개혁연대가 제시한 정치개혁과제는 총 26개로 '상향식 후보추천절차, 저비용·고효율의 당대 경선제도 확립, 여성할당제, 1인2표 정당명부제, 선거공영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정치자금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청문대상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의 시민운동과 정치참여는 구분되어야 하는가? 그 동안 지역의 시민단체내부에서는 정치참여를 극도로 금기시 해왔다. 공개적으로 자치운동과 시민운동의 병행을 주장했던 지역 시민단체에 많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영역의 정치참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문제는 정치참여의 방식인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시민참여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확인되었다. 줄대기와 밀실정치는 중앙정치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히 공선협 활동의 전부였던 시민사회의 조직적 정치참여가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거쳐서 이제는 노사모와 개혁국민정당 등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전환되고 있다. 그들의 정치참여는 과거의 '동원'에서 '자발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축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2, 30대의 젊은 세대로 이후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량으로 전환될 자원들이다.

지역정치에서도 이러한 자발적 참여와 축제가 가능할 것인가.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87년 항쟁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민의 탄생이었다면, 지난 총선연대의 활동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행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16대 대선은 이러한 노력의 절반의 완성이며, 나머지 절반은 2004년 지역정치에 완성되어야 한다.

자치와 분권은 2004년에 지역정치가 복원되어야만 출발할 수 있다. 지역정치의 복원은 누가 할 것인가. 정치개혁이 정당에만 맡겨 놓을 수 없듯이 지역정치의 복원도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공천=당선이란 공식에 성립하던 시절 반개혁적인 인사도, 무능력자도 DJ가 '낙점'하면 '추인'해준 정치인들이 그 동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또 그들이 지난 대선때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민심과 달리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만 보더라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개혁대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조직적으로 정치개혁을 준비하여야 한다. 지역정치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이 시민단체간에 고민되어야 한다.

지난 2000년 총선이후 정치개혁시도민연대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적했던 1.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평가자료 축적, 2. 지방의회, 자치단체 밀착감시 활동, 3. 유권자 운동의 정착을 위한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개정운동 전개, 4. 시민운동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 강화 등을 이제 검토하여야 한다.

지난 총선연대는 서울에서 시작되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정치를 고려하는 평가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약간의 혼선도 발생했다. 내년 총선은 지난 2000년 총선보다 훨씬 다양한 지역 정치지형이 만들어졌고 선택의 가능성도 훨씬 열려있으며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훨씬 높아져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별 정치개혁연대기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전국화하는 상향식 조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전체토론2>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발제3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민중운동의 전망

박이순(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첫 번째 질문. DJ는 몰락했지만 노무현은 어떻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가? 노무현은 대중들의 희망을 특수한 방식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권은 IMF 경제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역설했지만 그가 약속한 환란 극복은 찾아오지 않았다. 수치상으로는 IMF 이전 상황으로 복귀했지만 민중들이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DJ정권의 부패비리는 민중들의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노무현-민주당은 '축제의 정치'를 제공하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 발전이라는 실리적 기대를 자극함으로써 대중들의 희망을 조직해냈다.

두 번째 질문. DJ의 경제개혁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인가? 남한은 이제 '자본유치형' 국가로 변모했고, 이제는 금융화된 초민족적 법인기업(TNC)과 금융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남은 일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를 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는 식으로 오직 DJ가 닦아놓은 길로 달려나가는 것뿐이다. 금융개방과 TNC의 진입/이탈의 자유 보장은 오늘날 초민족적 자본의 편에서 볼 때 '억압할 수 없는 최저한도'이며, 새로운 수탈체제의 전제조건이다. 이는 노동운동을 비롯해 어떤 세력도 침범, 불가능한 신성한 영역이 되었고, 노무현정권조차도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

세 번째 질문. 노무현 정책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동북아 중심지 구상은 중국을 고려한 남한의 전략적 선택이다. 조세감면/토지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남한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다. 기술 및 산업의 특화, 교육 경쟁력 강화, 여성인력 활용(인구 감소·노령화의 대안), 사회안전망 구축이 정부 재정지출의 중심점이다. 그러나 '특화'는 곧 배제를 의미한다. 경쟁을 강화하고 살아남지 못한 자는 배제된다. 배제된 자의 불만 표출을 막기 위해 하향평준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다.

네 번째 질문.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다면 그 대안은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실로 답이 없다. 지배세력으로서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 외채위기가 재발한 남미의 경우는 국가의 붕괴, 사회의 해체로 이어졌다. 남한에서 경제위기가 재발한다면 이미 경제개방화가 대체로 완료된 상태이므로 그 결말을 예상할 수 없다. 이제 남한의 지배세력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본유치'와 '위기관리'일 뿐이다. 특히 TNC와 금융자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안정적인 통치체제의 구축이 중요한데, 사회운

등을 정책-로비형 NGO나 서비스형 NGO(사회복지의 중간전달자)으로 재편하여 정치체제 내로 포섭하는 게 현 정권의 목표다.

마지막 질문. 민중운동에게 미래는 존재하는가? 이 역시 실로 답이 없는데,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민중적 대안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다. 오늘날 지배세력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반대하는 노선은 모두 과거 사회주의나 (남미)파플리즘 식의 “국가주의적 중상주의”거나 “폐쇄경제”로의 퇴행이며, 그 실패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의 ‘코포라티즘’(관리주의)과 ‘전투주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에 영합하거나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 양자의 대립·반복은 민중운동의 ‘소멸(!)’을 의미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역시 세계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속에서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물론 옳지만, 그 문제의 강한 의미에서의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년 총선을 어떻게 회고할 수 있나?

회고해 보면 DJ의 당선과 IMF 경제개혁이 시작된 1997년부터 약 2년 반 후 치뤄진 2000년 4·13 총선은 매우 미묘한 시점에 벌어진 판이었다. 1999년 12월 김대중정권은 IMF 조기 종업을 선언했지만, 이후 대우재벌의 소멸로 이어지는 대우사태-증시폭락이 겹쳤다(특히 4월에는 연일 증시폭락이었다). 4월 10일 박지원 문광부장관과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이 벌여 부정부패, 선거법위반, 반인권 등 기준으로 낡은 정치인을 청산하자는 전국적 캠페인을 벌였고¹⁾, 김대중정권은 병역·재산(납세)·전과기록 등 후보자 신상공개를 단행했다. 민주당은 DJ의 ‘지역구도 타파’ 선언에서처럼 전국정당화를 내걸었고(특히 영남권 당선자 배출), ‘젊은 피’를 수도권 요충지에 출마시켰다. 이처럼 2000년 총선은 ‘IMF 경제개혁’의 현실을 놓고 정권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판이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사건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햇볕정책에 대한 판단을 묻는 판이자, 인물교체와 세대교체를 통한 낡은 정치관행의 청산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시험하는 판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모호했다. 먼저 투표율은 57%로 사상 최저수치를 기록했다(14대 71.9, 15대 63.9). 이는 유권자 2명 중 1명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총선시민연대의 투표참여와 ‘바뀌’ 캠페인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지만 대도시 지역의 투표율이 하락했고, 20-30대가 투표에 대거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 불참 또는 포기·거부가 (물론 야당에 대한 불신을 포함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야당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김대중정권이나 민주당에 대한 불만, 또는 당시 조성된 선거이슈에 대한 선택의 포기·거부로 이해해야 마땅할 것이다.

1) 총선시민연대가 ‘의정’ 활동을 문제삼은 인물은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지목한 원주의 함중원 후보 한 사람이었다. 이미 시민운동 중 일부 세력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그들이 생각하는 진보적 과제 즉 ‘재벌해체’를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환영하였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 한해서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30여개 지역에서 근소한 시소게임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 한나라당은 9석이 증가한 133석, 민주당은 17석이 증가한 115석을 얻었다. 양자 모두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권출범 이후 이렇다할 활동이 아무 것도 없지만) 국회 제1당의 위치를 수호했다는 점에서 자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차이를 16석으로 좁혔고 영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등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축했다. 수도권/호남과 영남에서는 대립이 뚜렷했지만 충청,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자민련의 몰락만 분명했다. 한편 전체 당선자 중 초선의 비율은 41%였으며, 초·재선을 합치면 70.6%였다. ‘386’ 후보는 대부분 지역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00년 총선에서 나타난 남한사회의 갈등선은 매우 복잡적이었다. 게다가 최악의 투표율이 문제였다. 이는 남한 사회가 전혀 안정적이지 않으며, 총선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기 어렵다는 지표였다(특히 20-30대 투표율 저조). 이러한 복잡한 갈등은 이번 대선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다.

김대중정권의 경제개혁과 새로운 수탈체제의 성립

1997-8년 남한의 외채전략은 IMF 구제금융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 채권은행들과 채무이행연기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IMF가 부과한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경제개혁이었다. 경제개혁의 목표는 과거 남한의 발전노선 즉 중화학공업화, 수출산업 발전과 같이 ‘민족적 발전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1980년대 이후 남미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었다(“기업하기 좋은 나라”, “Buy Korea”).

따라서 남한의 경제개혁에서 핵심은 일차적으로는 ① 기업 퇴출, 인수합병, 해외매각,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²⁾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기업·금융 부문의 부실을 처리하며, 재벌의 계열분리(특히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통해 남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5대 재벌의 부실확대를 막고, ② 국채를 발행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위기에 빠진 재벌·금융사에게 분배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재정’을 담보로 남한 경제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³⁾, ③

2) 1998년 3월 이현재 금감위원장은 워크아웃제도 마련을 지시한다. 이때 세계은행은 ‘런던식’ 모델을 제안했는데,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시간을 두고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채권단에서 이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국은 런던은행(중앙은행)이 조정했지만, 한국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세계은행과 합의했다. 1998년 6월 1차 기업퇴출이 이루어져 채권은행단이 55개 기업의 퇴출 명단을 한꺼번에 발표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10개 금융기관 대표를 불러 워크아웃 협약에 서명을 받았다. 1998년 말까지 88개 기업이 워크아웃 참여했는데, 이들 기업의 금융 빚은 대략 35조원 대였다. 2000년 말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해산했고, 워크아웃 대신 부실기업을 수시로 퇴출시키는 상시체제로 전환한다.

기업의 재무(금융)부문을 정리하고 직접금융중심으로 전환하여(글로벌 스탠다드), 결국 ④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이미 해외로 도피한 초민족자본을 다시 유인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⑤ 주식시장 부양책을 강구하여(저금리, 연금기금 투입) 남한을 '신흥시장'(주식·채권시장)으로 육성하고, ⑥ 지역차원의 무역자유화와 금융·서비스분야 개방을 선도하고 투자협정과 같은 유인책을 통해 초민족자본의 직접투자(FDI)를 끌어들이며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⑦ 김대중정권은 IMF협약에는 빠져있던 정리해고제 도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노동신축화'라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⑧ 남한 재벌은 계열분리를 이루고 초민족적 법인기업(TNC)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워크아웃 제도가 일단락되면서 2001년 김대중정부가 내놓은 '상시개혁시스템'의 골자는 기업구조조정전문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M&A시장을 활성화하며, 정크본드(투기등급채권) 시장을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퇴출이 '시장기능에 따라 강제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IMF와 세계은행 주도로 남한에서 이루어진 경제개혁은 남한 경제의 일대전환과 새로운 수탈체제의 형성을 의미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일단 과잉자본의 처리라는 점에서 기존 생산설비와 고용의 지속적인 파괴를 의미했다(기업퇴출, 인수합병, 워크아웃,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특히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 개방, 초민족자본의 진입/이탈에 대한 탈규제, 초민족자본의 금융기법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국부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로가 형성되었다(M&A, 이자소득, 환차익 등등). 또한 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포트폴리오, 직접투자)는 기존 산업의 파괴와 산업특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붕괴 또는 불균등화를 촉진하였다(특히 남한은 '농업포기'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다면적인 갈등과 불안을 심화시켰다 - 역설적이게도 건국 이래 처음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해외이민을 떠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대중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기본적으로는 'IMF 위기극복'의 불평등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노동과 불안정화, 수도권/지역의 격차 확대, 여성 빈곤의 심화는 그 주요한 양상이었다. 이는 2000년 총선 결과로 드러났다. 지역주의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지역경제의 위기가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젊은 층의 투표율 저조는 IMF위기를 전후한 시점에서의 취업대란, 반(半)실업 등 그 세대의 삶의 불안을 반영한

3) 1998년 5월 결정된 공적자금 규모는 64조원이었다. 3월 당시 각 금융기관의 확정된 부실채권이 47조원이었다. 여기에 잠재부실 규모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KDI는 '47조원 굶하기 2'를 해 100조원을 전체 금융부실로 추산했고, 정부는 이중 절반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종합금융회사와 서울제일은행에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14조원을 더해 64조원이란 숫자를 만들어졌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의 15%를 금융부실에 투입하기로 결단한 셈이었다. 한편 2000년 9월 재경부는 40조원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국회에 요청했다(40조원 신규조성, 10조원 회수 사용, 총 50조원 조성).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대통령 직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포함), 국정조사 등을 추가 공적자금 조성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자위는 재경부 장관 산하로 가게되었고, 2001년 1월에 실시된 국정자금 조사도 중인 신문 방식 문제로 여야간 다툼이 발생해 유야무야로 끝난다. 2003년 1월 17일 '국민의 정부' 5년 정책 평가 보고회에서는 차기정권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공적자금 상환 대책에 대한 부문, 세대간 이견 해소"를 언급했다.

다.

노무현의 등장과 '반창연대'

집권 말기 DJ의 몰락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었다⁴⁾. 2001년 11월 DJ가 총재직을 사퇴하고 2002년 6월 TV생중계로 두아들의 구속에 대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할 때까지 그는 사태를 거의 제어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은 6·13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연전연승'의 기세를 타고 쉽게 정권탈환을 손에 쥌 수 있을 듯 보였다. 노무현조차 국민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DJ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여론의 동향을 추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선 승리 직후 노무현의 대선 구상 역시 불투명했다. 예컨대 "원칙과 상식", "국민통합" 등 추상적 구호를 내걸거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자"와 같이 정서에 호소할 뿐이었다. 6·13 지자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자리 가운데 11곳 장악할 때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무현의 당선은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와 개혁국민정당 발족을 통해서만 오직 가능했다. 노무현-정몽준의 단일화의 진실은 '반창 연대'의 실현 즉 '이회창에게 이길 수 있는(젊은) 후보의 선택'이라는 게임에 있었다. 그러므로 노무현의 대선승리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 전략에 기반한 것이며, 게임의 고유한 도박성과 시선집중이 주는 이득을 누린 결과다. 단일화는 '네가티브'와 '도박'이라는 두 다리 위에서 세대교체와 인적 청산, '낡은 정치 청산'을 대중적으로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드디어 DJ를 정치의 풍경에서 제거하고 '죽은 인물'로 만들었고, 그들 대체할 인물이라는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반면 개혁국민정당은 핵심적 지지층이 될 386세대의 정치적 집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386세대에게 각인된 민주화운동에 있어서의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의 부정적 역할을 상기시켰고, 또한 기존의 NGO의 '정치중립' 방식을 뛰어 넘는 정치 참여를 고무했다.

결국 노무현의 등장은 이회창-한나라당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회창-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유포한 수구와 기득권(+엘리트주의)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양상을 '수줍게' 반복했다⁵⁾. 이에 비해 노무현은 세대교체와 인

4) 2000년 총선 이후 청와대-민주당이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이 폭발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쇄신파' 연쇄 파동이 발생한다. 2000년 9월 추미애 등이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 자민련과의 공조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첫 번째 파동이 벌어졌고, 같은해 12월 김성호 등이 박순용 검찰총장 탄핵안 표결 무산(선거사범 편파수사를 이유로 한나라당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실력행사로 본회의 표결이 무산)을 비난하면서 두 번째 파동이 벌어졌다. 또한 정동영은 권노갑 최고위원의 2선 후퇴를 주장하기도 했다(12월17일 권노갑 사퇴). 2001년 5월에도 안동수 법무장관 임명파동(이른바 '총성문건')에 따라 민주당은 크게 흔들렸다. 이 때 DJ는 "국정개혁에 관한 구상을 정리해, 6월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후 가뭄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전격 연기해버렸다. 2001년 10월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은 폭발했다.

5) 노무현의 국민경선 승리에 대해 한나라당의 초기 반응은 김대중의 실정, '삼총 비리'에 대한 집중

적청산을 통한 기득권과 부패를 해체하며 미국과의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며 중도적 개혁을 발전시킬 인물이라는 대립적 이미지를 창출했다(특히 TV토론에서 노무현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양자를 보수주의와 이상주의로 밀어내며 중도적-합리적 개혁이라는 이미지를 쌓고자 했다).

노무현 지지층의 이질성과 갈등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풍경에서 DJ를 제거하고 이회창 대 노무현이라는 일대일 대립구도를 형성한 게 전부가 아니다. 노무현의 선거전략은 복잡적이었고, 그에게 표를 던졌던 지지층도 이질적이었다. 노무현의 주요한 지지세력을 거칠게나마 도식화해보자.

첫째, 노무현에 대한 '실리주의적' 지지가 있었다. 남한의 증시부양은 'IT(정보산업)혁명', '벤처창업'이라는 바람을 타고 올라섰고, 벤처기업은 기존 경영조직·관행의 일반적 대안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지식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라는 김대중정권의 전략에 따라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벤처-금융업의 확대는 이른바 '386세대'를 일종의 '비즈니스네트워크'로 전환시켰다. 게다가 386세대는 남한에서의 물질적 성장을 경험하였고(삼저호황) 미국식 생활양식-소비문화의 확대를 '진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결집은 '자기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DJ의 정책개혁이 노무현을 통해 보완되는 것을 지지했다. 한편 이 세대의 수많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가 기업경영진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부의 권위주의적 '지배구조'에 대해 갈등에 처해 있으며, 이는 기득권이나 '고루함(?)'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유발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기 이해, 문화적 동질감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형성했다.

물론 DJ정권의 경제개혁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집단 중에는 '개혁적 지식인'도 포함되어야 한다(이들은 노무현이 당선된다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다

적 공격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즉 노무현을 김대중의 계승자로 공격하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선거전략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 노무현의 과거 과격하거나 급진적인 발언을 문제삼아 불안한 인물로 공격한다, • 노무현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로서 신상 공격이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인제보다 노무현이 쉬운 상대"라는 입장이 회자되었고, 최병렬, 이부영 등이 요구한 '국민경선 분위기 조성'에 대해 이회창은 무심하게 반응했다(이회창vs박근혜vs김덕룡이었다면?). 한편 정몽준-노무현 단일화 이후 이를 '정치야합'으로 몰아붙이고 '국정원 도청설'을 들고 나왔으나 모두 이산화하는데 실패했다. 이들의 실패에는 한국적 보수주의 이념 정립의 실패가 깔려있다. '이승만의 단정수립, 박정희의 개발독재 등은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우산 하에서 민족적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남한의 기존 보수주의 기본노선은 유지 불가능했고 변형되어야 할 시점이었다. 또한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이 1987년을 전후한 '민주화 이행'에서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한 386세대의 일반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부르주아 내부의 기본적 컨센서스를 이념화, 구호화할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야만 했으나, 네가티브 전략으로 일관한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내부의 정당개혁 논의는 이번 선거결과로 나타난 '비대하고 둔감한 시스템' 즉 계파연합 구조의 타파에 맞춰 있다.

고 생각했다). 또한 여기에 기술관료적인 NGO들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노동운동 내에서 노무현에 대한 공공연한 혹은 잠재된 현실주의적 지지도 존재한다. 노동자 대중의 일부는 대체로 IMF 이전 상황으로 복귀했고, 이는 현상유지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낳았다. 또한 DJ 당시에는 죽어 있었던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정상화하고 사회적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한다(이는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양자 모두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386세대-화이트칼라-개혁적 지식인-노동운동 내 일부 상층은 DJ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역시 핵심적 지지층으로 육성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둘째, 청년층의 도시(롬펜)프롤레타리아(불안정 노동력층)의 일시적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전혀 확실하지 않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47.8%였고, 지난 대선에 비해 약 15% 하락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율 하락에 중요한 기여를 한 셈이다. 20대 청년노동자층은 IMF위기 당시 취업대란을 겪었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크나큰 불안정성을 경험했다. 또한 오늘날 교육정책의 목표는 중심적 노동력과 주변적 노동력을 분화시키는 것이므로, 20대의 대부분은 '다기능화'라는 명목으로 다수 주변적 기능을 습득했다(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소비확대라는 생활양식을 강요받았으나('10대 시장', '20대 시장') 미래는 극히 불투명했다. 이들은 삶의 조건이 불안정한만큼 사회적·정치적 의식도 불안정하다. 이번 대선에서 강력한 '반창' 정서가 작동했으나 이들의 정치적 입장은 종종 모순적이다(즉 진보/보수의 틀로 쉽게 포섭되지 않는다). 이들이 참여한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촛불시위 참여는 기성세대에게 위력적이었고 선거의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무규정적 행동에는 쉽게 참여하지만 제도적 행동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노무현의 인기영합주의적인 제스처와 함께 이회창에 대한 차악으로서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지역감정'에 근거한 잠정적 지지가 있었다. 오늘날 지역감정의 물질적 토대는 구조조정 이후 심화된 지역경제의 위기이며 이것이 지역적 소외감으로 등장했다. 지역감정이 실리추구적인 감성에 기반한 것이라면 지역감정을 동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노무현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이라는 실리적 희망을 조작하여 지역감정을 동원, 장악한 것이다. 노무현은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DJ의 계승자로 제시했고,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스스로가 3김 이후 부산·경남을 대변할 정치지도자로 자임했고, 충청권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희망을 제시했다.

따라서 노무현 당선을 안정적인 지지연합의 구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 집단의 이데올로기는 서로 갈등적이거나 대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시적 제휴를 표현하는 방식은 '새롭다', '활기차다' 등등의 정서적 호소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히려 정책개혁의 전개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이유로) 대중적 이반을 낳을 요인을 깔고 있다.

노무현의 정책개혁 전망

이제 노무현은 인물대결 구도의 선거전략을 마무리하고 남한에서의 정책개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태세로 돌입했다. 분명히 현재는 DJ처럼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전부터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초헌법적인 권한을 휘둘러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 노무현은 IMF 경제개혁의 기초적 목표 즉 금융위기 직후 위기관리책을 넘어서, '경제성장-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포괄적 정책목표를 내걸었다. 그리고 개혁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고 여러 정책검토사항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탐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김대중정권의 정책기조의 유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남한의 경제구조는 이미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에 조용하여 재계-관료-학계의 태도도 수렴되었다 - 사실 김대중 집권 당시 한나라당의 기본 노선도 DJ 개혁에 대한 '비판적 지지'였다(예컨대 공적자금 오남용 비판, 구조조정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 등)6).

이제 남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는 남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를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이 남한을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면 노무현 정권은 실제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직면한 문제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7). 현재 김대중정권에 이어 노무현이 들고 나온 '동북아 중심지'는 초민족기업의 세계경영전략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남한의 적응책이다(즉 중국의 성장에 따른 중국진출을 위한 일종의 '관문'으로서 남한의

6)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선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를 확인해보면, 1)재벌개혁 문제에 있어서 DJ정권과 재벌간의 미묘한 쟁점을 반영하는 쟁점이 있었으며(그러나 대부분은 개혁의 속도, 범위의 문제이지 의제 자체의 거부는 아니었다) 2)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데올로기-정책에서의 분기점이 존재하며(여성정책, 비정규직 보호 등등) 3)조세개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서 한나라당의 '부자유대정책'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미국의 우호세력의 차별성이 있었는데, DJ정권의 정책 유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무현을 우호하는 세력이 있었고, 남한 정치체제와 한미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회창 우호세력이 있었다(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의 직접적 대립과 개입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듯하다).

7) KDI가 2002년 발표한 <2011 비전과 과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전략적 선택이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는 남한의 경제여건이 1)노동과 자본 등의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중요해지는 단계로 돌입했고, 2)세계기준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 확산되며, 3)기술혁신 경쟁이 격화되고 R&D 규모가 커지면서 연구개발의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추진되며, 4)중국경제 규모가 2015년 미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5)고령화 사회로 진입(2020년 65세 이상 비율이 15.1%로 두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 남한 경제의 성장 동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연구능력의 혁신(기업과 지역특성의 요구에 맞춰 연구개발체제의 변화, 6T 등 신기술 개발에서 선택과 집중), 2)전통 산업으로 정보화기술의 파급, 3)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중국과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전략 마련, 특히 조세감면/토지임대와 같은 단순 비용측면에서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숙련인력과 경제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4)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증대(특히 물류비), 5)교육의 질적 성장(중등교육의 경우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즉 평준화 해소. 대학교육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수요 충족, 여성고학력자 활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화는 "남한 경제의 미래는 거대 중국시장을 위협요인이 아니라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전제하에서 1)다국적기업이 한국을 동북아지역의 부품조달, 금융, 디자인,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2)인천공항, 제주도를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3)항공, 해운, 철도 등 물류 중심지화, 4)남북경제교류협력을 주요 과제로 뽑았다.

활용가치를 높이는 구상). 따라서 노무현정권이 기본 과제는 4대부문 구조조정을 보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감시감독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진척, ·초민족기업의 활동범위를 확대시켜주기 위한 무역자유화와 투자협정 체결, ·남한의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대형화-겸업화 유도,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합의기구 구성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남한의 기술개발과 산업의 특화, 경제 인프라 구축, 평준화 해소와 교육개혁, 여성고급인력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책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조건의 창출이다. 남한에서의 정책개혁은 DJ의 몰락을 통해 심대한 위기에 처했고, 차기 정권은 이러한 붕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게 사활적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혁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재결집,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재생산되는 정치-행정-사법구조의 혁신 또는 지배세력의 도덕성 재확립, ·(보수주의적 온정주의든, 또는 자유주의적 실용주의든 간에)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보완 등이 관건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대한 현실주의적 지지층을 핵심적인 지지기반으로 구축하여 개혁의 불가피성, 지속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고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개혁(특히 정당 개혁과 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고용확대나 빈곤축소의 외형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미봉책을 모색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시도들은 YS-DJ와는 다른 세대의 주류 개혁세력 형성의 성과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민중운동의 미래

하지만 문제는 개혁의 진전 과정에서 실제적인 민중들의 삶의 양상이 될 것이다. 과연 남한의 경제개혁과 민중의 삶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자본유치' 국가로 변모한 남한 경제는 세계경제위기로부터 안전한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노무현정권은 그가 제시하는 각종 '사회통합'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가? 특히 DJ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안한 조건 속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노무현정권이 검토하는 실용적인 방식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갈등의 폭발을 지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구사될 정책은 민중들의 삶의 조건을 '하향평준화'하고 상위 20%에게는 안전과 소비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인수위는 정책 아이টে으로 입안하기 위한 각종 국가기구를 구성하면서 운동세력과 지식인 그룹을 포섭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국가차별시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각종 정책자문기구 구성이 그러하다. 또한 '서비스형' NGO를 육성하여(정부·지역사회·민간 네트워크화 구상) 기존의 사회운동 그룹들을 재편성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는 결

과적으로 민중운동이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응하고(스스로를 정책-로비형 또는 서비스제공형 NGO로 정립), 위기관리체계에 체계적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남한의 진보정당 운동은 정치개혁 흐름과 함께 지배정당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고 전선형성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고비를 맞이할 것이다.

오늘날 남한 민중운동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IMF 경제개혁은 일단락되었고 남한의 경제구조는 완전히 변화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노무현정권 5년이 나갈 방향도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노무현정권은 금융개방과 TNC의 진입/이탈의 자유 보장이라는 '성역'을 세우고, 신자유주의 반대의 목소리를 '국가주의적인 중상주의'나 '폐쇄경제'로 복귀하자는 주장이냐며, 이미 길이 닦인 그 방향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은 김대중정권 초기와 같은 생산과 고용의 파괴라는 극단적 양상을 회피하고 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전 정권과 '다르다'는 혼동을 생산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정권은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특히 사회적 위상 제고)을 민중에 대한 지원으로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조건은 남한에서의 '비판적' 운동의 소멸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민중운동은 노무현의 정책개혁에 대해 김대중정권 초기보다 더욱 엄밀히 비판해야 할 시점에 섰다. 또한 정책개혁이 실제로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심화시키는 양상을 정확히 포착할 때에만 대중적 운동화의 발판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착화된 운동은 노무현정권 하에서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토론2>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토론

2003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신철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1. 2002년의 경험

2002년 우리사회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노풍(盧風), 월드컵 경기에서 붉은 악마로 대표된 국민적인 응원열기, 우리 국민들이 여중생 사망사건의 범피자로 보았던 미군 병사에 대한 무죄평결 이후의 촛불시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위력을 보인 인터넷 등은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변화를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세계화, 지식정보화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변화와 함께 지구상에 최후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냉전이 해체되고 있는 현상들을 반영하는 변화이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젊은 세대의 등장이다. 월드컵 응원에서 10대의 대대적인 참여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엄숙하게 지켜오던 태극기를 패션으로 이용하는 대담한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보인 2030의 활약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의 활용이다.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인터넷의 활용 여부가 된 듯하였다. 인터넷은 기존 저대 언론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새로운 의사소통, 여론형성의 도구가 되었다. 기존 언론이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하였던 것에 반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노사모'로 대표되는 열렬한 정치운동의 등장이다. 이 운동은 참가자들 개개인이 정치적인 출세를 꿈꾸지 않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이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시민운동임과 동시에, 기존 시민운동이 지켜온 정파적인 중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이었다. 이는 기존 시민운동에 대하여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 우리 시민운동은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하나의 과제로 안게되었다.

2. 2003년 시민운동의 과제

2월 25일이면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 새로운 정권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그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게 된다. 그러나 87년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3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취임 초기의 가졌던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오랜 세월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이끌었던 김영삼 정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김대중 정부 모두 집권세력이 부패에 연루되어 집권 후반기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았다.

새로 구성되는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소수과 정권으로 출발할 노무현 정부의 개혁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시민운동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하였고, 새 정권이 이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발동의 불이 되었다. 한동안 긴박하게 돌아가던 분위기를 벗어나 일단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그 해결은 그리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사회 내부의 개혁과제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정치개혁, 투명한 사회 건설, 재벌개혁,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립 등이 될 것이다.

정치개혁 중에서도 지금 정당개혁이 정치권의 첫번째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하여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개혁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는 참여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비판하는 역할-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 을 계속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민운동은 2002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떻게 시민운동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과제가 있다. 시민운동의 사이버(Cyber)화, 보통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이 시민운동이 내부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셋째, 노동운동 등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공동사업에 대한 모색이다.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민중운동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이 펼치는 공동사업은 그 내용이 공공선에 부합하고 운동의 방식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공동사업이 주로 민중운동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새로운 공동사업은 보다 진전된 내용과 방식이 될 것이다.

3. 시민운동과 정치운동

'노사모'에 대한 예에서 보듯이 이미 새로운 정파적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2000년 총선연대 등의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와 낙천낙선운동이라는 반대(negative)운동을 넘어선 적극적인 지지(positive)운동이었다. 기존 시민운동이 정파적인 중립성을 지키며 활동하는 데 반하여 '노사모'는 정파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활동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한 형태였다. 이는 기존 시민운동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정치성이 강하고 그 영향력 또한 크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은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이며, 보다 중요한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이 '정책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이 정파적 중립성을 계속하여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고민할 시점은 주요 정당이 정책정당이 되고, 그간 시민운동이 주장해온 사회개혁 과제의 대부분을 어느 정당이 정책으로 채택할 때라고 본다. 이때는 시민운동이 계속하여 정파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내부분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 될 때에는 현재와 같은 시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에 반비례하여 축소될 것이다. 이 때는 현재와 같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시민운동은 정당으로 통합되고, 단일한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재편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비정당적인 형태로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직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시민운동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단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주요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변화 발전함에 따라 시민운동 내부에 분화가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정파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시민운동은 필요하고 또한 지속될 것이다. 시민운동은 여전히 비정부(Non Governmental), 이익추구 배제(Non Profit), 비정파성(Non partisan)을 유지하며 발전할 것이다

<전체토론2>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토론

사회운동과 문화적 관점

강내익(문화연대 집행위원장)

1. '문화'의 사회적 위상

문화는 정치, 경제와 함께 사회적 실천을 구성하는 3대 층위의 하나이다. 오늘날 사회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경제가 주로 상품이나 재화의 생산과 판매, 소비 등을 통한 영리의 영역을 가리킨다면, 정치의 영역과 관련된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권력 관계를 가리키고, 문화는 과학과 기술, 학문과 지식, 교육, 예술, 상징 및 재현의 체계, 가치와 규범(윤리 혹은 도덕) 등의 분야에서 인간들이 발현하는 창조성의 발휘 능력과 그런 능력이 축적되고 구현되는 사회의 층위를 가리킨다. 정치가 경제적 관계를 규정짓는 데 관련되어 있고, 경제활동에 과학기술 혹은 지식, 나아가서 예술적 창의성이 문화적 '자본'으로 활용되고, 또 문화영역에서 정치적 역관계나 경제적 자본이 작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사회적 실천 층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두 개를 완전히 포괄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운동 전반에서 문화적 관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문화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외면한 채 사회정책을 수립해왔으며, 정부 주도의 지배적 사회정책에 진보적 개입을 기획하는 사회운동도 이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문화가 문화관광부의 소관으로만 간주되어 정부의 조직, 예산 편성 등에서 늘 뒷전으로 밀리듯이 사회운동에서도 문화적 관점은 늘 '사탕 하나 더 주는' 격이 아니면 '금강산 식후경' 격으로 뒤로 밀린다. 문화운동이 노동, 농민, 빈민, 환경, 시민, 여성, 평화, 교육, 보건의료와 함께 개별 부문으로 위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단적이 증거이다. 물론 문화를 좁게 문화예술로 간주할 경우에는 거론한 여러 사회운동 부문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정치와 경제와 같은 수준의 사회적 실천의 층위이다. 이들 부문 전체에 경제와 정치의 층위가 있듯이 문화의 층위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사회운동은 정치적, 경제적 관점과 함께 문화적 관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를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계급, 민족 또는 인종, 성차, 성애, 세대, 지역 등의 사회적 분할 요인들을 가로지르며 환경, 교육, 학문, 과학기술, 관광, 주거환경, 도시설계, 인권, 평화 등의 사회적 의

제들과 영역들을 포괄하거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문화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 이외에 교육, 학문, 과학기술, 정보, 관광, 주거환경, 체육, 환경, 여성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이와 관련된 정부의 부처나 사회적 의제로 조직된 사회운동 부문에서 문화적 의제들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행정 단위, 운동 부문에서 문화정책을 수행하고, 문화적 사안을 다룬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개별 부처나 부문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전문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부분이 없진 않으나, 이 과정에서 일관된 문화적 관점이 실종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정보통신, 과학기술, 건설교통, 교육학술, 관광, 통일, 여성, 환경, 산업, 노동 등의 부문들을 가로지르는 통합적인 문화적 시각과 원칙이 사라질 경우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이들 분야에 반영할 수 있는 길도 사라질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회운동이 정치, 경제와 함께 3대 사회적 실천의 하나라는 위상에 걸맞게 문화를 대우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의 조직, 발전 전략, 국정 운영 방식, 예산 편성, 인적 자원의 배치 등에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회운동에서도 문화적 관점을 수용하자. 사회적 실천 전반에 걸쳐 문화와 경제, 문화와 정치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사회운동의 과제들도 문화적 가치 구현을 위해 새롭게 설정해보자.

그러나 사회운동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려면 전제가 있다. 무조건 문화적 가치를 전가의 보배인양 휘두를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보는 관점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

2. 문화를 보는 새로운 관점

최근 들어와서 문화를 보는 지배적 관점은 '문화산업론'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이 거세지면서 이윤 창출에 효율적인 문화만 중시하는 관점이 성행한 결과인데, 이와는 다른 올바른 문화관점이 필요하다.

1) 인간발전의 관점.

문화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전제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인간이 배제된 문화, 자연 상태의 문화란 있을 수 없다. 문화는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방식이면서 동시에 인간적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조건, 방식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는 따라서 인간발전의 조건이다.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삶이 고갈되거나 궁핍해지지 않고 풍요로워져야 한다. 경제발전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다. 인간발전은 이윤이나 재산의 축적을 통한 경제발전 이상의 어떤 것이다. 경제발전이 곧 인간발전이라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공동체를 파괴

하며, 개발을 위해 자연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해도 무방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발전의 관점에서 서면 경제를 위해 자연 생태계 파괴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종래의 관점은 수정되어야 한다. 문화를 보는 새로운 관점은 경제발전과는 구분되는 인간발전의 관점이어야 한다.

2) 창조성의 관점.

인간의 창조성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꿈과 이상을 실현코자 자연을 변형하는 능력이 있다. 문화는 이 변형 능력을 지닌 인간이 노동을 포함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성된다. 이렇게 본 문화적 창조성은 좁은 의미의 예술적 창조만이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문제풀이와도 연관된다.”¹⁾ 지역 간 도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필요한 인간적 능력들은 문제해결의 능력이며, 그런 점에서 문화적 능력에 속한다. 지혜를 짜내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상징적 기호를 쓰는 능력, 예술적 실험을 수행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창조적 능력이고 문화는 이 능력의 형성으로 구성된다. 문화는 인간이 지닌 창조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3) 자원의 관점.

문화를 좁은 의미의 경제적 ‘자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문화를 자본 축적을 위하여, 이윤의 확대를 위하여 개발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문화도구론적 관점을 거부하고 문화를 자원으로써 가꾼다는 생각을 키워야 한다. 문화재 보호라든가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 등에 이와 같은 관점이 들어 있지만 이는 자원으로써의 문화 개념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원으로써의 문화’는 사회가 지닌 창조성, 혹은 문제해결 능력, 나아가서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 역량을 말한다. 이런 문화적 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지가 우리사회의 역량과 발전 정도를 가늠하게 해준다. 문화적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적 삶을 풍부하게 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원은 당장 이윤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자본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인간의 삶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4) 자율성과 주권의 관점.

문화는 개인들의 주체성이 형성되는 사회적 장이다. 사람들은 문화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관습, 삶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며, 이 결과 독특한 민족적, 계급적, 성적, 세대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율성과 주권의 원칙이다. 자율성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문화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문화민주주의는 여기서 문화적 주체들이 지배문화에 의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제3장 참조.

한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원칙을 가리킨다. 주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문화들 사이에는 차이와 경계가 있고,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특정한 하위문화나 소수문화, 특정한 민족문화는 고유한 형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존을 위한 토양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 문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문화로부터 억압, 지배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한다. 오늘 이런 자율성과 주권의 관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세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문화적 예외’를 무시하는 투자협정 체결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문화적 원칙이 아닐 수 없다.

5) 다양성의 관점.

문화적 정체성은 다양한 차이들로 구성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이질적 타자를 배척하는 문화, 더럽고 남루하고 비루하고 추하고 역겹다는 이유로 ‘비정상적’ 사람의 형태들을 거부하는 결코 풍요로울 수 없다. 단일한 지배문화만이 군림하는 문화는 억압적이고 파시즘적이다. 풍요로운 문화를 바란다면 문화를 다양성과 차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문화의 차이들, 다양성은 문화의 건강을 보장하는 최선의 조건이다. 생명다양성이 확보될 때 자연의 생태환경이 최적 상태로 보존되는 것처럼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 문화도 최적의 발전 조건을 갖게 된다. 문화의 다양함 속에서 질적 차이들이 자유롭게 드러나고, 문화적 특이성들이 상호관계를 맺을 때 문화 역시 만개할 것이다. 일률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취향, 정체성, 욕망, 즉 상이한 삶의 방식들이 공존하고, 삶의 차이가 널리 포용될 때 사회는 더 나은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6) 공공성의 관점.

문화의 사적 소유, 특히 독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터전은 특정한 삶의 형태를 유일한 것인 양 강요하고, 문화를 강점하거나 독점해서는 이를 수 없다. 해와 달은 누구도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화 역시 소유보다는 사용의 대상으로 보고, 또 독점하기보다는 공유하고 향유할 때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질 것이다. 독점적, 배타적 문화 활동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화적 활동이나 생산물도 서로 함께 참여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정책에서 이런 관점은 소수의 능력 있는 개인들만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문화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더 넓히는 것은 문화민주주의의 확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에 공적 개념을 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사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이 아닌 문화에 대한 대중의 참여, 문화의 대중적 공유, 그리고 향유가 가능하려면 문화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문화를 이상과 같이 인간발전, 창조성, 자원,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사용과 향유 등의 관

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를 보는 지배적인 관점과는 크게 다르다. 하지만 그와 같은 관점을 거부할 경우 우리는 문화의 고유한 태도 혹은 가치를 부정하게 될 것이고, 문화를 정치와 경제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될 것이다.

3. 문화의 사회적 기능

문화의 사회적 위상은 높아져야 하고, 문화운동과 사회운동은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기본 입장이다. 문화가 더 높은 위상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다면적 역량이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에는 어떤 사회적 기능이 있는가? 감성적 표현의 기능, 윤리-도덕적 기능, 창조-생산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1) 감성 표현 문화는 표현이다.

문화란 감(수)성적 영역에 속하며, 감(수)성은 표현되기 때문이다. 문화영역은 흔히 사회의 '성감대'로 인식된다. 이 감성적 능력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있을까? 어떤 사회도 감성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건강해질 수가 없다.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 연민, 동정이 없는 사람, 불의에 대한 적개심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문화는 사회의 기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윤리-도덕적 기능.

문화는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태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나는 이것은 문화가 멋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멋이 있는 삶은 비굴함, 위선, 불의와 거리가 멀다. 멋은 생기발랄함, 떳떳함, 용기, 기백 등에서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가 윤리와 도덕과 태생적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본다(이것은 도덕 및 윤리가 칸트가 말하는 미학적 실천과 관련을 맺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용기가 전혀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런 사회가 멋이 있을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두 뒤통무니만 뺄 뿐이라면 그런 사회는 문제해결 능력도 없을 것이고, 생존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이다. 역동적인 사회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은 힘이 넘치는 사회이다. 사람들이 도덕적 용기가 넘칠 때 사회도 생기가 돈다. 고학력자가 많다거나 전문인력이 많은 것만으로 문화적 역량이 넘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문화적 역량에는 정직성과 같은 윤리적 도덕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직한 사회라야, 도덕적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회라야 멋진 사회이다. 문화는 멋진 삶의 형상을 통해 사회의 윤리-도덕적 기능을 강화한다.

3) 창조성-생산성.

문화가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문화는 위에서 말한 문제해결의 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은 과학, 기술, 학문의 발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문화의 사회적 역량은 넓은 의미의 창조적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 생산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4) 정치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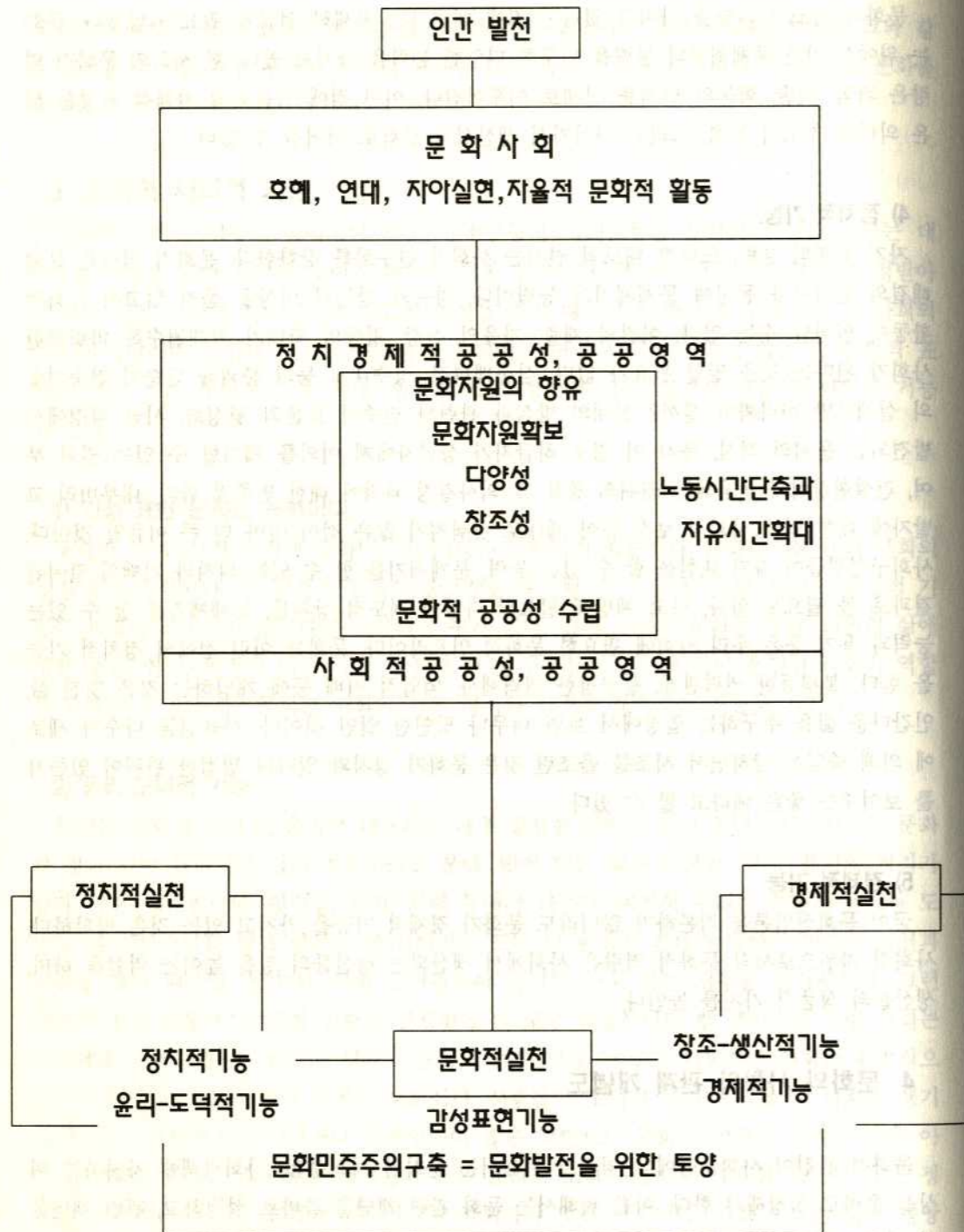
자기 표현의 능력, 도덕적 태도의 견지는 사회의 민주화를 강화한다. 문화적 역량은 문제해결의 능력이자 동시에 문제제기의 능력이다.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품지 않고서 문화적 활동이 일어날 수는 없다. 이견의 제출, 자유의 신장, 평등의 확대가 확대될수록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의 붕괴를 단순히 건축기술의 실패로만 바라봐야 할까? 설계의 방식과 관련된 민주적 토론의 활성화, 시공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적시, 특히 이 경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 권위의 종류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합의,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장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아마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의지와 기백의 결여된 결과로 볼 필요도 있다. 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등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문화적 인프라이다. 문화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 기능을 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 불공정한 권력행사, 억압적 지배 등에 개입하는 것은 멋진 삶,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사육신들 다수가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시조를 읊조린 것은 문화가 정치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5) 경제적 기능.

굳이 문화산업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문화가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문화적 역량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생산물의 상품적 가치를 높인다.

4. 문화와 사회의 관계 개념도

문화적 관점이 사회운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사회운동, 사회정책에 차지하는 위상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 관련 개념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관련 개념들의 지형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개념도는 문화정책이나 문화운동의 위상, 기본 방향, 목표 설정, 수행 방식, 효과 등의 범주를 상호 관련성 속에서 살피기 위한 예비적 시도이다.



토론

노무현정권하에서
진보적사회운동진영의 과제와 전망

이희수(민주노동당 대협실장)

1. 노무현 정권의 정책방향과 전망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연장선에 있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 전략,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 공세에 적극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햇볕정책, 한미공조정책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부정부패와 사회공동체 파괴, 민주주의의 해체 등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적극 보완하는 기조를 가져가고자 하고 있음. 신자유주의 정책의 장애인 전근대적 재벌구조, 무원칙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이에 따른 구조적 부정부패 등 천민자본주의적 형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조세제도의 개혁, 빈부격차 해소 등 사회복지의 확대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구사, 구체제의 청산과 수구 보수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민주개혁과 대북평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등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위와같은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두가지 설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조치로서 전면적인 대외개방속에 동북아 경제강국으로 도약함으로써 고용확대와 빈곤감축등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동원과 정치개혁을 통한 2004년 총선에서의 다수당 확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드러났듯이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남, 노동유연화, 노동과 환경등 사회권에 대한 규제완화 등 자본중심의 정책과 함께 노동 3권 및 민주적 권리의 축소, 시장과 경쟁을 위해 공공성의 축소와 사회복지의 축소, 각종 환경규제완화 및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생태파괴적인 개발정책의 강행, 대외개방의 전면화로 인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파괴와 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은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외에 대안이 없다는 전략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한, 미국의 패권적 정치경제적 개입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확대, 사회통합형 각종 개혁조치등은 후퇴할 가능

성이 높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텍사스 콘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북핵소동과 전쟁위협속에서 대외개방의 전면화와 자본친화적 경제개혁조치로 선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 민중적 사회운동과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동시에 개발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속에서는 역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을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운동이 급진화되면서 정부정책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권 역시 사회통합적인 민주개혁이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을 노무현 정권 역시 인지하면서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시민단체가 지난 시절 김대중 정권이 실패한 것은 시민운동의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있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괴적 결과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단체의 문제의식 결핍에서 유래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점을 깊게 생각하여 노무현 정권에 대한 관계설정을 고민하였으면 한다. 즉 개혁담론을 뛰어넘는 전략적 대응이 없는 속에서는 개혁담론에 대한 개입전략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반신자유주의 관점과 전략속에서 민주사회개혁을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2.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민중운동을 중심으로

1) 2003년 민중운동진영의 3대 투쟁방향

(1)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의 기치아래 WTO 농업개방과 교육,의료 등 서비스 시장개방 저지, 투자협정, 경제자유구역법 지정등으로 인한 노동·환경·사회권 무력화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노동유연화)와 공공재 성격을 갖는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연대투쟁전선을 형성한다.

(2)여중생 살인규탄 투쟁과 소파개정운동, 이라크 전쟁·한반도 전쟁책동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평화군축, 북미간 불가침·평화협정체결과 비핵지대화 등을 내걸고 전사회적 차원에서 반전반제국주의 운동을 공세적으로 전개한다.

(3)국가보안법 폐지, 정치개혁, 공무원 노조 인정과 손배가압류 철회 등 노동기본권 쟁취,

언론·교육·보건의료·조세개혁,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민주·사회개혁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주의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2) 주요 투쟁전략과 방침

2003년 정세에서 민중적 사회운동진영은 WTO 개방공세와 자유무역 공세하에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당할 것이며 동시에 전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부시정권이 추진하는 지구적 차원의 전쟁공세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반세계화·반전운동은 2003년의 주요한 사회운동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반세계화·반전운동을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지배수탈과 제국주의 패권의 군사적 개입력을 약화시켜야 개별국가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한 개혁적 조치들이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1) 반세계화·반자본투쟁

① 3-4월: 2003년 민중연대 투쟁 선포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운동과 연계를 갖는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결성하여 공동연대투쟁 태세 구축

-WTO 농업·서비스 개방 양허안 저지와 투자협정·자유구역법 폐기등을 내걸고 민중연대투쟁 전개

② 9월: WTO 각료회의의 파탄을 위한 세계동시다발 반세계화 투쟁 전개
-WTO 농업개방반대,신자유주의 정책중단을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 공동투쟁 전개
-멕시코에서 9월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대투쟁 전개

③ 11월:민중연대 총궐기 투쟁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정치사회운동단체등이 총궐기하는 민중연대 투쟁
-WTO 농업·서비스 시장 개방 저지와 농업회생, 교육의료 개혁,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등을 내걸고 민주노총 총파업, 전농 상경투쟁, 학생 동맹파업등 총궐기투쟁 전개

(2) 반전·반제국주의 투쟁

①2월: 세계동시다발 반전평화투쟁 전개
-미국의 이라크 침공저지를 위한 국제공동행동 전개
-반전평화공동실천차원에서 진보적인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공동투쟁 과제로 조직

- ② 6월: 국제평화대회 개최
 - 6.15 남북공동선언의 국제적 연대 강화로 미국의 패권정책 저지
 -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책동 중단과 국제평화를 위한 연대
 - 반전평화운동과 자주통일운동,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망라하는 국제평화대회위원회 조직

- ③ 8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통일대회
 -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위협 저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평화군축으로 교육의료재정과 일자리 창출
 - 외세의 개입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 쟁취
 - 통일연대, 시민단체등을 망라한 자주통일운동 전개

(3) 민주·사회개혁 투쟁

- 노동, 농민, 빈민, 청년학생등 각 부문별로 반신자유주의 민중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
-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주노동자 노동 3권 보장, 핵폐기장 중단과 각종 국토파괴 개발정책 중단, 언론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등에 대한 사회적 연대 강화

3. 진보적 사회운동진영(과거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같이하는 시민·민중운동)간의 연대와 전진을 위한 몇가지 의견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진영간의 공동투쟁전선을 강화하자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용인하는 조건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업고 등장한 노무현 정권의 민주개혁을 강제해내고 견인해내기 위해서도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진영의 저항과 개입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항한 진보적 사회개혁의 전망과 대안을 열어가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중심으로 주요전선을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에 수구보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민주개혁전선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상호 두 개의 전선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적인 진보적 민주사회개혁운동이라는 하나의 전선으로 통일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중운동은 노무현정권과 대립충돌하고 시민운동은 노무현정권과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개혁을 위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분할된 구도로 사회운동 진

영이 분열되어 대응할 경우 우리나라 사회운동 진영의 연대와 전진은 심각한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개입과 저항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운동진영의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은 시장적 세계화를 추인하고 그 폐해를 보완하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주체를 만들어가는 전략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WTO 농업·서비스 개방, 자유무역협정과 경제자유지대 추진등과 관련하여 농업회생방안,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방안, 민중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방안등이 사회운동의 과제로 주요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 환경, 농민운동간에는 공공성 확대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 환경파괴적인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대안, 농업회생방안등으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반세계화를 위한 사회운동진영의 연대활동과 관련하여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 등 사안별 연대기구 활동이 보다 통합적으로 강화되었으면 한다.

2) 자주평화의 과제를 해결할 사회운동진영의 상설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자주통일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민중중심의 사회개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위협과 신냉전을 통한 군비경쟁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은 필연적으로 후퇴하기 마련이다.

-자주평화운동과 관련하여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진영간에 사안별로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안별 연대구조의 난립으로 운동의 성과가 조직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운동과 관련하여 대중조직의 결합도는 취약한 편이다. 기왕의 자주통일운동진영을 포함한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속에서 기층 대중운동이 결합한다면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자주평화운동을 통합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상설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진보적 시민운동의 주도적인 참여속에서 복잡다단한 연대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3)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라는 형식적 경계를 허물고 사회운동의 전망과 비전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민중운동은 혁명적이고 시민운동은 개량적이라는 것은 계급적 조건에서 맞지만 주체의

조건에서 보편은 받은 사실이고 받은 그렇지 않다. 민중운동은 적색도 많지만 국방색도 많다. 시민운동도 개량과 자유주의적 운동도 많지만 급진적이고 탈자본주의적인 운동도 많다.

-따라서 민중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넘어서서 사회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조운동의 경우 급진적인 사회운동은 물론이고 인권, 문화, 여성, 생태, 반전평화, 반핵환경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과의 교류와 결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운동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분리하려는 경향은 상당히 이데올로적이다. 이같은 경향은 시민단체내에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는 시민운동을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계급운동과 사회변혁운동과 분리하여 시민운동은 체제내적인 사회운동으로 한정시키려는 시민운동 주류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민 사회운동도 중립성과 공공선이란 추상적 가치수준에서 내려와서 사회운동과 현실정치에서 이데올로기적 노선과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상 중립성의 차원에서 준정당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진보적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진영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보적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에 민중적 의제를 전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민중운동 진영과의 강력한 제휴없이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 개입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리라는 것은 지난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일정정도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운동과 관련하여

-지역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역적 시민운동이 정치참여운동으로만 가서는 안된다. 중앙과 지역의 차별심화속에서 지역에서의 사회운동강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환경운동, 공동체운동간에 의사소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민중운동진영은 지역민중연대에 기초한 전국적 차원의 민중연대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과의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차원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에 의사소통과 연대를 위한 지역 사회포럼과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증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더욱 넓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전체토론2>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토론

지역운동에서 본 한국사회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광식(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1. 지역운동의 관점:

- 억압의 현장으로서 지역-지역 수탈의 합리화로서 불균등 발전을 강요하는 분단·개발·세계화의 억압구조¹⁾
- 중앙소용돌이 사회에서의 독립적 지역운동-서울중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와 지역소외의 현실, 3류로서의 지방, 변방으로서의 지역운동 취급의 보편성(운동의 서울중심성)²⁾
- 과제의 중첩과 운동 자원의 빈곤-미성숙한 지역 시민사회와 국가적 개혁과제 그리고 열악한 시민참여의 조건(의명성 부재 및 참여 조건의 미흡)³⁾

2. 지역운동의 과제로서 지역사회의 민주화

- 민주화의 전제 : 3중적 억압구조
 - 1) 지역사회의 독립성의 확보-지방분권과 분산
 - 2) 보수적 지배구조의 해체-일당지배와 수구지배연합
 - 3) 보수적 시민사회의 민주적 재편성-언론·교육·자치제도의 개혁과 시민참여 활성화
- 1) 그동안 지역간 불균등발전의 문제는 동서간의 문제로 취급되곤 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이며, 이러한 격차는 이른바 외세의존적 압축성장의 의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벌리는 방향으로 경쟁력 형성을 강요하며 이에 따라 지방민들의 비정규직화와 경제적 궁핍은 더욱 일상화 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 내부의 개발과 차별의 강요도 새로운 명분을 획득해 가고 있다.
- 2) 한국사회에서 독립적 지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중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 바로 지역사회의 민주화의 과정이라 할 때 독립적 지역운동은 우리 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 3) 전근대적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공존하는 사회로서 한국사회의 특징은 지역사회운동이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민주화와 국가개혁의 동시적 수행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취약한 지역시민사회의 기반(보수적 지역시민사회)은 시민사회 자체의 민주화를 위한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두가지 가설의 오류

가. 2중전략의 추진: 국가와 지역의 동시적 민주화의 추진

1) 국가(중앙)권력의 민주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화: 민주화의 지체를 설명치 못함

2) 지방의 민주화를 통한 국가(중앙)권력의 포위를 통한 민주화: 중앙집권형 사회의 특징을 이해치 못함.

나. 지역토착 지배세력 해체의 가능성에 대한 가설의 오류

1) 수도권 지역의 우선적 민주화 가능성: 중앙권력의 그늘에서 지역토착지배세력의 취약성을 근거로 보나 오히려 강력함.

2) 탈수도권 지역의 우선적 민주화 가능성: 중앙권력의 영향력이 거의 동질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3. 지역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 민주화를 위한 운동의 전략: 시민참여의 활성화

1) 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 지역사회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시민참여의 조건을 만드는 과제

2) 언론·교육의 개혁: 보수적 지역사회의 가장 큰 근거지

3) 지방정치의 다원화·민주화: 부패한 중앙정치에 대한 충성과 후원으로 예측된 일당 지배와 지역토착 재력가들만이 대표되는 현실

- 지역별 특성과 운동의 확산과 심화: 종합적 조사와 비교, 사례 연구가 필요함.

운동의 과제, 주체, 실천양식이 상이할 것임.

1) 대규모 상공업 행정 도시(이른바 국토개발 거점도시)-공업형과 서비스형 도시로 구분

2) 농촌을 배후로하는 중소도시

3) 농촌지역

- 총선연대와 지방선거의 경험

가. 총선연대의 활동: 지역사회의 지배연합(성장연합적 성격을 띠는 정치행정엘리트+ 수구언론+토착경제인)의 정치적 대표과의 대결에서 수구이데올로기 연합(수구언론+관변지식인+관변단체)의 한축인 관변단체 대비 사회적 영향력의 제고를 가져옴. 운동의 양식은 서울이 제안한 운동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개혁과제 중 정치개혁을 위한 구태정치인에 대한 청산운동이었음. 지배연합에 대한 공격으로서 내용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음.

나. 6·13 지방선거: 통일된 전국적 대응을 형성치 못함으로서 중요한 국가개혁과제로서 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지 못했음. 서울이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이를 넘어설 지역의 준비도 미흡했음.

다양한 선거참여운동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지배연합에 대한 공격적 모습도 보였으나 독자적 정치운동의 전망을 구축하지 못한 속에서 산발적 운동으로 그침.

- 현황의 반성적 성찰

가. 대중운동화-동원형 집회·시위 이외에도 다양한 대중참여와 일반 지역민 주도의 운동을 형성 발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임. 단체내부의 민주화, 단체들의 연합과 전문성 제고, 지역의제·이슈 선정에 있어서 주도성⁴⁾ 형성 필요.

지역내 진보적 인사들의 효율적 네트워크가 활성화와 운동단체의 민주화가 진전된다면 지역운동의 현장성이라는 특성상 대중운동의 전형 창출 가능할 것임.

나. 정치개혁연합의 형성-지역사회의 개혁전선을 구축하는 기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개혁전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하는 부문(민중부문)과 대립축을 우회하며 영향의 정치를 지향하는 시민부문의 분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일한 개혁정치연합(그 성격과 형식의 다양성 인정한다해도) 가시화 미흡.

지방분권과 지방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실험의 축적이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서 모범적 지방정치개혁연합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임. 울산의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운동연합의 연대 시도, 광주 등의 비민주당 연합시도, 경상도 지역의 비한나라 연합의 시도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다. 지역운동의 인프라 형성- 운동가의 충원구조의 형성에 일반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사회운동의 세대적 고립 문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대응 노력 매우 빈곤. 권역별 연대의 활성화와 지원·협력체제 구축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에 뿌리를 내린 인재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노력이 가시화되어야함. 지역운동인큐베이터, 지역운동 투신에 대한 지원 및 지역운동활동가 학교, 군단위 운동 지원 기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음.

라. 언론·교육 개혁 운동의 형성·활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보수적 지역사회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재생산 기제로서 언론과 교육개혁운동 미흡, 보수적 시민사회의 재생산의 악역을 담당하는 주부 계층의 사회참여도 촉진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마을단위 풀뿌리 운동은 교육문제와 주부층의 참여 속에서 폭발성을 가질 수

4) 많은 경우 지역운동은 지역사회의 벌려진 쟁점을 쫓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발과 부패의 사안이 나타난 경우 이를 폭로하고 감시하는 후속적 대응의 양상이다. 지역사회의 역사구조적 진단에 의거하여 쟁점을 먼저 형성하는 쪽으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있는바 지역별로 풀뿌리지역운동지원센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새로운 지역운동의 도전 과제: 지역차원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연대/비판과 감시에서 대안과 세력화로

- 일당지배와 수구적 지배연합의 해체를 위한 도전: 정치운동의 분화와 모색
 절박한 정치개혁의 과제->절차적 민주성, 투명성, 합리성 획득시 참여가 문제가됨.
 사회참여에서 정치참여로 발전하는 지역시민사회운동의 형성 필요
- 진보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 네트워크의 구축
 한정된 자원의 분산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지역별로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통지역
 적 전망과 공동실천의 구상이 구체화되어야함.
-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상대적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지역사회의 약자 집단의 세력화는
 운동발전의 필수적 과제, 양극화되는 지역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연대, 실천이 필요.
- 풀뿌리 생활공동체 운동의 실험
 마을단위에서 비자본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생활의 운동화가 새롭게 모색되어야함.

5. 몇가지 제언

- 서울 중심적 운동관의 혁신-서울도 또 하나의 지역, 지역의 주체화도 필요
 (지역과 함께하기 위한 희생과 혁신이 필요)
-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의 쟁취를 위한 공동협력
- 지방의 언론의 개혁과 바른 지역 언론의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 지역운동가들의 상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 서울배제에서 지역주체의 연대로
- 풀뿌리운동의 연구와 지원을 위한 기금과 연구소 활성화 추진
- 지방정치개혁운동의 활성화와 연대체 결성 추진

토론

16대 대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최민희(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무총장)

1. 현재 우리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고 사회여론을 수렴하는 고유의 기능을 넘어 1) 중요정책 제안기능 2) 국정과 사회전방에 대한 평가기능 3) 교육 및 계도기능 4) 사법적 기능 5) 사회의제 설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사적 권력기관화'해있다.
2. 언론의 이러한 권력화과정은 권위주의정권시절 권위주의정권의 홍보도구로 기능하면서 대가로 주어진 물질 토대에 의해 가능했다. 이러한 언론의 특혜적 물질 토대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재생산되어왔고 정치권력은 이를 묵인해왔다.
3.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이 아닌 친일행위를 통해 성장하고, 군부독재시절에는 민주화운동보다는 군부를 유지하는 한축으로 성장해온 언론의 '이력'으로 인해 우리 언론은 친일 친독재 =반민주 반민족 이라는 원죄를 지니고 있다.
4. 언론은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권위의 공백'을 틈타 독자적인 힘을 구축했고 현재 언론은 정권창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자부할 만큼 권력화했다.
5. 권력화한 언론과 언론인들은 기득권화여 정치권력 경제권력집단 , 그리고 해당집단의 엘리트와 일상적 협조 관계속에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갈등관계에 놓인다. 그러므로 언론 권력을 정상화하는 문제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해당집단의 지배그룹과 언론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6. 2002 대선은 언론권력의 정권창출을 불가능하게 했다. 대선결과는 1)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새로운 관계(여전히 경제권력과 언론은 과거의 틀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임) 2) 언론권력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3)언론권력과 인터넷 매체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